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2025. 9.



목 차

I. 감사 개요	1
1. 감사의 목적	1
2. 감사기간	1
3. 감사 실시대상기관	2
4. 감사실시 경과	4
II. 감사실시 주요내용	7
1. 국 방 부	7
2. 합동참모본부	43
3. 병 무 청	56
4. 방위사업청	62
5. 육군본부	79
6. 해군본부	87
7. 공군본부	92
8. 해병대사령부	96
9. 육군 제2작전사령부	98
10. 국방과학연구소	102
11. 국방기술품질원 및 국방기술진흥연구소	104

Ⅲ.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6

1. 국 방 부 (100건)	106
2. 합동참모본부 (28건)	116
3. 병 무 청 (20건)	119
4. 방위사업청 (51건)	121
5. 육군본부 (29건)	127
6. 해군본부 (13건)	130
7. 공군본부 (14건)	132
8. 해병대사령부 (12건)	134
9. 육군 제2작전사령부 (8건)	136
10. 국방과학연구소 (8건)	137
11. 국방기술품질원 (5건) 및 국방기술진흥연구소 (2건)	138

Ⅳ. 증인 · 참고인 채택 현황 및 신문내용 139

1. 증인·참고인 채택 현황	139
2. 참고인 신문내용	140

1. 감사의 목적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방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통해 국정운영 실태를 점검하여 입법활동, 정책심의, 예산안 심사 등에 반영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및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감사기간

2024. 10. 8.(화) ~ 10. 24.(목) [17일간]

3. 감사 실시대상기관

구 분			대상기관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 (67)	중앙행정기관(3)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	
	국방부 직할부대·기관 및 소속기관 등 (33)	직할부대 및 기관(27)	국방정보본부	국방출판지원단
			국군정보사령부	국군재정관리단
			국군방첩사령부	국방부조사본부
			국군의무사령부	국방부군비통제검증단
			국방시설본부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국방부군무지원단	국방대학교
			계룡대군무지원단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국군체육부대	국방통합데이터센터
			국군복지단	국방정신전력원
			국군간호사관학교	
	소속기관 등(6)	국군수송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합동군사대학교	
		국군심리전단	드론작전사령부	
		국군지휘통신사령부	전략사령부	
합참·각군본부 및 해병대사령부(5)		국방전산정보원	국방홍보원	
각 군 예하부대 및 소속기관 (21)	육군(12)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	
		6.25 비정규군보상지원단	대체역 심사위원회	
		합동참모본부	공군본부	
		육군본부	해병대사령부	
	해군(4)	해군본부		
		육군제2작전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육군교육사령부	육군인사사령부	
		육군사관학교	육군수도방위사령부	
공군(4)	육군3사관학교	육군동원전력사령부		
	육군군수사령부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		
	육군항공사령부	육군학생군사학교		
	육군작전사령부	해군교육사령부		
해병대(1)	해군군수사령부	해군사관학교		
	공군작전사령부	공군교육사령부		
	공군군수사령부	공군사관학교		
	서북도서방위사령부			
공공기관 (5)	국방부 산하(3)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전직교육원	
	방위사업청 산하(2)	전쟁기념사업회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포함)	
본회의 승인대상기관(1)			군인공제회	
계			68개	

※ 현장점검

일 자		현장점검 기관/부대	장 소
10.11(금)	오후	서울지방병무청	서울
10.14(월)	오전	공군작전사령부	오산
	오후	육군특수전사령부	이천
10.21(월)	오전	대한항공 항공우주사업본부 테크센터	부산
	오후	해군작전사령부	

4. 감사실시 경과

가. 감사반의 편성

국방위원회 위원 전원(17인)의 단일감사반으로 편성함.

구 분	교섭단체	위원명	비 고
감사반장	국민의힘	성 일 중	위원장
감사위원	더불어민주당	부 승 찬	간 사
		김 민 석	
		김 병 주	
		박 범 계	
		박 선 원	
		박 찬 대	
		안 규 백	
		추 미 애	
		허 영	
		황 희	
	국민의힘	강 대 식	간 사
		강 선 영	
		유 용 원	
		임 종 득	
		한 기 호	
	비교섭(조국혁신당)	조 국	

나. 사무보조직원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입법조사관 등 국방위원회 소속 직원, 속기사, 원내교섭단체 소속 정책연구위원, 위원 보좌진으로 함.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국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오 명 호	
	전 문 위 원	류 승 우	
	행정실장	신 세 민	
	입 법 조 사 관	김 용 우	
	〃	김 대 은	
	〃	길 기 혁	
	〃	조 정 일	
	〃	김 영 훈	
	〃	황 태 울	
	행 정 관	고 형 태	
	주 무 관	김 윤 진	
	〃	강 량 인	
	〃	박 성 희	
국회사무처	속 기 주 무 관	홍 미 지	
		최 수 미	
		강 순 오	
		강 지 혜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박 애 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김 종 신	
위 원 실	보좌직원	위원실당 1인	

다. 감사일정

일 시	대상 기관	동시수감기관	장 소	비 고
10. 8(화) 10:00	국 방 부	국방정보본부 국군정보사령부 국군방첩사령부 국군의무사령부 국방시설본부 국방부근무지원단 계룡대근무지원단 국군체육부대 국군복지단 국군간호사관학교 국방출판지원단 국군재정관리단 국방부조사본부 국방부군비통제검증단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국방대학교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국방통합데이터센터 국방정신전력원 국방전산정보원 국방홍보원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 6·25 비정규군보상지원단 한국방연구원 국방전직교육원 전쟁기념사업회 군인공제회	국방부 (용산)	
10. 9(수)	휴 일(한글날)			
10.10(목) 10:00	합 동 참 모 본 부	국군수송사령부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국군심리전단 사이버작전사령부 국군지휘통신사령부 합동군사대학교사령부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 드론작전사령부 전략사령부	합참본부 (용산)	
10.11(금)	오전 병 무 청	대체역 심사위원회	국회	
	오후 《현 장 점 검》	서울지방병무청(병역판정검사 시찰)	서울	
10.12~13	휴 일			
10.14(월)	오전 《현 장 점 검》	공군작전사령부	오산	
	오후 《현 장 점 검》	육군특수전사령부	이천	
10.15(화) 10:00	방 위 사 업 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국방기술진흥연구소 포함)	국회	
10.16(수)	자료정리			
10.17(목) 10:00	육 군 본 부	육군교육사령부 육군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육군군수사령부 육군항공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육군인사사령부 육군수도방위사령부 육군동원전력사령부 육군학생군사학교	계룡대 (계룡)	1박
10.18(금)	10:00 해 군 본 부	해군작전사령부 해군군수사령부 해군교육사령부	해군사관학교 해병대사령부 서북도서방위사령부	
	15:00 공 군 본 부	공군작전사령부 공군군수사령부	공군교육사령부 공군사관학교	
10.19~20	휴 일			
10.21(월)	오전 《현 장 점 검》	대한항공 항공우주사업본부 테크센터	부산	1박
	오후 《현 장 점 검》	해군작전사령부		
10.22(화) 10:00	육군제2작전사령부		대구	
10.23(수)	자료정리			
10.24(목) 10:00	전체 수감기관		국회	종합 감사

II

감사 실시 주요내용

1. 국 방 부

분 야	감 사 실 시 내 용
대북대비태세 및 경계태세	○ 국방부는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제지하기 바람. ○ 북한에 말라리아 공동 방역을 적극 제안하고, 이를 군사 대화 재개의 계기로 삼기 바람. ○ 정보 유출 우려가 있는 CCTV 교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안보 공백이 우려되는 실정임. ○ 복원 중인 GP 중 세 곳의 경우는 소총 유효 사거리인 600m 안팎으로 북한과 매우 근접해 있어, 복원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해당 지역에서의 북한의 충격 도발 등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할 것으로 보임. ○ 연락관을 우크라이나에 파견하는 경우, 인원수와 관계없이 전장에 파견하는 것이므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임. ○ 해도에 포함된 정보를 통해 북한이 침투 작전 시 이를 활용할 여지가 있기에, 취약점을 대비하고 분석하여 보완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남에서 휴전선을 넘어 북으로 가는 무인 비행체에 대해 기술적 통제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남북 관계 긴장을 유발하지 않기 위한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첨단 과학기술을 적용한 과학화 경계 체계를 도입하고 있으나, 경비 병력 수는 감소하지 않으므로 새로운 경계 작전 개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GP 철거·불능화 검증과 관련해 제대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정황이 있음.

분 야	감 사 실 시 내 용
	○ 시설 경계를 민간군사기업(PMC) 또는 예비역을 활용하여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이번에 발사하는 북한의 군 정찰위성은, 북·러 관계를 고려했을 때 러시아와의 기술 협력 결과로 보임. ○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이후, 수십 차례의 쓰레기 풍선·핵 능력 강화·미사일 도발·남북 연결 도로 및 철도 폭파·러시아와의 군사적 밀착 등의 위협이 이어짐. 이제라도 국방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며 국민의 힘과 의지를 결집할 필요가 있음. ○ 군사 합의에 방송을 포함한 적대 행위 중지 규정이 있었던 것은 우리 군의 대북 심리전을 북한 정권 체제 유지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보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방증임. ○ 북한의 도발에 대해 LED 전광판, 드론 및 레이저 쇼 등을 통한 다양한 방식의 대북 심리전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북한의 도발로 우리 국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한다면 단호하고 철저히 응징하기를 바람. ○ 소위 북한군의 파병 또는 용병 수출 행위는 국제법과 유엔 안보리 결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라고 보임. ○ 전쟁을 수출하는 국가가 되어 탈선을 거듭하고 있는 북한의 참전을 엄중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철수를 촉구하는 바임. ○ 북한 군인들을 전쟁터에 총알받이로 보낸다는 내용을 북한 주민들에게 널리 알릴 방법을 구상하여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함. ○ 이번 북한의 불법 파병을 계기로,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북

분 야	감 사 실 시 내 용
	대서양조약기구 전장정보수집활용체계(NATO BICES)의 조속한 가입을 국방부가 신속히 추진하기 바람. ○ 북한과 러시아의 동맹이라는 안보 위기가 초래된 것은, 1차적으로는 러시아와 북한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결과이며, 2차적으로는 윤석열 정부가 러시아를 적대국으로 선언하고 포탄을 우회 지원하는 등 외교정책의 실패 때문으로 볼 수 있음. ○ 지난 6월 북한과 러시아 정상회담을 통해 신조약이 체결되었는데, 이에 따라 남북한 유사시에 러시아의 참전 가능성이 생김. 대러시아 정책이 노태우 정부 이후 30년 이상 유지되어 왔으나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위험 부담이 매우 염려스러움. ○ 우크라이나전에 있어 파병이 아닌 참관단 파견의 경우, 다른 조건에 걸리지 않는다면 현대전을 치르는 북한군을 직접 관찰할 기회라는 점에서 고려해볼 가치가 있다고 보임. ○ 우크라이나에게 살상무기를 제공하는 것은, 한국과 러시아 간의 전략적 이해관계와 향후 관계 회복 가능성을 고려할 때 해서는 안 될 사안이며, 특히 북한이 러시아의 지원을 믿고 무력 국지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임. ○ 독일 방산업체가 해킹당해 KF-21과 KF-50 관련 자료가 북한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음. ○ 북한군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국방부 차원에서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 및 우크라이나와의 정보 공유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고도화되고 실체화되는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교

분 야	감 사 실 시 내 용
	육훈련 강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북한의 핵 공격 대응을 위한 한반도 작전계획 및 군사 교리·교전 수칙에 북핵 도발 시나리오를 보다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군 편제 및 무기 체계·연합연습 체계 등을 실전에 적용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나갈 필요가 있음. ○ 오물풍선에 생화학무기를 탑재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생물테러에 대비하여 국내산 탄저백신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북한의 소음방송에 따른 강화도 일대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대책 및 보상이 필요함. ○ 합동참모의장은 임무전환에 대한 실효성을 검증하고 임무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동안의 추진 현황을 검토하고 임무전환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미뤄왔던 경계임무 전환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북한의 탄도미사일 4.5t 신형 고위력 미사일 시험의 성공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 합동참모본부는 유엔군사령부와 북한이 통지문을 주고 받는 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를 토대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한미동맹 및 국제정책	○ 북한, 중국, 미국, 일본 등 각국이 국익을 위한 전략적 안보 정책을 추진 중이므로, 우리나라의 대외 전략과 구체적으로 추진한 내용을 보고할 필요성이 있음. ○ 나토의 요청에 따라 우크라이나로 파병하는 경우 군이 중심이 돼야 하며, 국정원이 함께 가는 것은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음. ○ 미국의 핵자산을 전·평시 한반도 임무에 특별 배정하는 것은 레토릭에 불과한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발언이나

분 야	감 사 실 시 내 용
	국방부 설명자료에 포함시키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음. ○ 전시작전권 전환이 안보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가 없고, 미국 대통령이 누가 당선될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전작권 전환을 거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임. ○ 북한과 러시아가 동맹을 맺은 상황에서, 일본과의 관계도 반일 감정에 휘둘러서는 안 되며, 국익과 안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냉정하게 판단해야 함. ○ 폴란드 방산 수출의 큰 부분이 K-2 전차 수출 문제와 관련되어 있으나, 아직 최종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이므로, 한-폴란드 정상회담 배석을 위해 국방부 장관과 방위사업청장이 잠시 이석한 것은 이해가 필요함. ○ 유엔군사령부는 쿼드, 오키스, 칩4 등 소·다자 틀 및 나 토 회원국까지 포괄하는 군사 기구로, 강대국들이 이 제 도에 대해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국익에 부 합하는지 면밀히 살펴야 함. ○ 일본이 유엔군사령부 가입을 희망하고, 한일 상호군수 지 원협정(ACSA)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일본이 한반도 전구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더 많은 주도권을 확보하려 는 전략적 포석으로 보임. ○ 국방부는 유엔군사령부의 확대를 무제한 허용하면서 정전 협정 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무시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 이고 있다고 생각함. ○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군사적 노력을 지속하여, 명실상 부한 전작권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이스라엘과 관련해, 한국은 무기거래금지조약(ATT) 가입 국으로서 전쟁범죄 연루 가능성이 있는 국가에 무기를 수

분 야	감 사 실 시 내 용
	출하지 않을 의무가 있음.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한반도 주변국들의 대외 전략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대외 전략을 한반도 평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미국과의 용산기지 이전협정 수정안 협상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고 추진하기 바람. ○ 전략사령부 및 드론작전사령부 등의 신설은, 군정체계의 질서 부족과 예하부대 병력 및 장비 부족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과장되거나 사실이 아닌 우크라이나발 정보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부는 여기에 흔들리지 않고 한미 정보를 통해 신중히 정보 파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대통령께서 7월에 우크라이나 방문 중 사즉생 정신으로 연합해서 싸우겠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하셨는데, 이는 러시아를 적대국으로 돌릴 가능성이 있음. ○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은 자유연대의 상징적 의미를 가지며, 6·25 전쟁 당시 우방국들의 참전으로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음을 고려할 때, 침략국인 러시아를 규탄하고 자유연대 세력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 북러 관계가 동맹 및 혈맹 관계로 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동맹의 작전계획이 불가피하게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전시작전권 전환에 있어, 북한과의 관계에서는 한미의 이해관계가 일치한다고 보이나, 북한 외 국가와의 전쟁 상황에서는 한미 간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이 있음. 이에 따라 전시작전권과 한미동맹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음.

분 야	감 사 실 시 내 용
	○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정치와 국방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있음. ○ 대한민국 안보와 국익을 반영하기 위해, CNI 고도화와 작전계획 수립이 중요하며, CNI 운용 방안을 작전계획 수준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음. ○ 북핵 위협 및 사용 임박 시, 양국 간 협의 절차를 고도화하고, 전략자산을 포함한 핵전력 전개 및 배치 방안과 관련된 문서상의 확약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한미원자력협정 유효기간은 20년으로, 2035년 재협상 시한을 앞두고 핵잠재력 확보를 위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음. ○ 원자력협정에서 일본 수준의 개정을 요구하면, 즉각 핵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신호로 오해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뢰를 바탕으로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함.
전력운영·훈련	○ 단기 비상근 예비군 제도의 훈련 기간을 20~30일로 늘릴 필요가 있음. ○ 비상근 예비군 보상비를 현실화하고, 최소 응소 기준 등을 포함한 지급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THAAD 추가 배치를 적극 추진하여 전국을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위협에서 보호하고, 수도권 중첩 보호 체계를 구축하기 바람. ○ 장기 비상근 예비군의 규모를 대폭 늘려 운영하며, 그 효과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음. ○ 재외무관 파견 시 현지 문화에 대한 국방부 차원의 교육 지침이 필요함. ○ 해외 무관 중 30%에 달하는 인원이 TOEIC 700점대 이

분 야	감 사 실 시 내 용
	하인 상황에서, 최저 어학 기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 기초 체력 위주의 단순 체력 검정을 넘어, 실제 전투 임무 수행에 대비할 수 있는 체력 검정 기준을 마련하기 바람. ○ 국군의 날 행사 방식을 ‘국군 감사 주간’ 과 같은 캠페인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고려하기 바람. ○ 분기별로 균등한 병력을 수급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 육군 간부의 체력 수준이 저하되었으며, 용사의 체력 현황은 전산화된 데이터가 없으므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상병 건강검진을 병역 판정 검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실시하여 복무 중 건강 변화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훈련병 대상 군기 훈련 금지와 휴대전화 사용 허용 방침을 재검토하기 바람. ○ 외교부와 협력하여 해외 항만의 우선 사용이나 신속 처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최근 예비군 자원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는 예비군 자원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함. 이에 여군의 예비역 편입 확대를 위한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학생 예비군과 관련하여, 예비군 훈련에 참석한 학생에게 결석 처리 등 불이익을 준 사례가 언론에 공개되었으며, 확인되지 않은 불이익 사례도 많을 것으로 보임. ○ 여군의 예비역 편입 비율이 유지될 경우, 여군 확대가 전체 예비 전력 감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학생 예비군들이 참여하는 기본 훈련 중 훈련 안내 시간

분 야	감 사 실 시 내 용
	이나 안보 교육 시간을 활용하여, 학습권 보장과 관련한 내용을 안내하면 학생 예비군의 성적 및 출결에 대한 불이익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반복되는 암호호 유출 문제에 대해, 장병들의 인식 전환 등 대책을 강구하고 별도로 보고하기 바람. ○ 탄피 회수 완화 시범사업의 전 부대 확대 적용을 검토하기 바람. ○ 유해 발굴 사업 등 야외 작업 시, 신증후군 출혈열 예방접종과 같은 사고 예방 및 안전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 마약류 소변검사를 대체하거나 보완할 방법을 마련하여, 군 내 마약 침투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 전훈 분석팀 또는 모니터링팀 형태로 우크라이나에 파견될 경우 명확히 파병으로 간주되므로, 국회 동의 등 법적 절차를 준수할 필요가 있음. ○ 전장에 군인을 국회의 동의 없이 파견하면 사후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음. ○ 천무 최초 지상 표적 실사격 훈련은 국방부가 주도적으로 조율한 사례로, 향후 훈련에서도 국방부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함. ○ 첨단기술의 군 도입을 위해, 국방부 K-RMF 제도를 신속히 무기체계에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음. ○ 외국의 민간 위성을 통한 지도서비스에 우리 중요한 안보 시설이 노출되는 것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조직·인사·재무	○ 방위사업청의 기존 연구개발(R&D) 기능을 국방부로 대부분 이전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더 이상 방위사업청을 분리시키지 않기를 바람.

분 야	감 사 실 시 내 용
	○ 국방 연구개발(R&D)의 국방부 이관 추진은 방산비리 방지 취지에서 방위사업청을 신설한 목적과 그동안의 운영 성과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재검토가 필요함. ○ 국방부 복수차관제 도입에 대한 추진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국방부가 복수차관제를 도입한다면, 전통적인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1차관과 군사력 건설 및 첨단 과학 분야를 담당하는 2차관으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사이버사령부의 문민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군무원이 맡고 있는 부사령관 직위를 민간 직위로 전환하거나, 감찰실장을 민간 직위로 전환하는 방안이 필요함. ○ 국군정보사령부의 문민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내부 감사 및 감찰 직위를 민간 직위로 전환하기 바람. ○ 국방정보본부와 정보사령부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국군정보사령부의 인력, 부대 구조, 조직문화를 해편 수준으로 개편하고, 기밀 유출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보안 시스템 강화와 견제 체계를 확립해야 함. ○ 국방정보본부장의 과도한 지휘권과 정보기관의 중복된 기능을 해소할 대안 마련이 필요함. ○ 정보본부장은 순환보직 직위이나 해군·공군에는 해당 직위에 적합한 3성 장군이 없어 육군이 계속 담당하고 있으며, 전략본부장은 공식 상태임. 운영적 측면에서 이는 상당히 문제가 있음. ○ 고려대학교 사이버국방학과 출신자의 민간 유출이 심화되고 있으며, 민간과의 처우 격차를 해소하지 않으면 더욱

분 야	감 사 실 시 내 용
	악화될 것으로 보임. ○ 사이버작전 수당 신설, 최초 임관 계급 상향, 진급 최저 복무기간 특례조항 신설 등을 통해 사이버전장에서 기존 인원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 병력이 감축되는 상황에서 사이버 핵심 인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고려대학교 국방사이버학과와 내년부터 모집을 시작하는 세종대학교 국방사이버학과 등 특성화 대학 출신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함. ○ 사이버전문사관학교 출신 인원을 일반 행정이나 기타 업무에 배치하는 것은 설립 취지와 맞지 않으므로, 해당 인원은 사이버 분야에 배치할 필요가 있음. ○ 급여 인상에 맞춰 병사 진급 기준을 높이고 더욱 엄격한 진급 심사를 진행하며, 감봉·강등 등의 징계를 적절히 활용해야 함. ○ 군 경력증명서 발급과 관련해, 해군·공군·해병대 출신 예비역은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으므로, ‘국방 증명서 통합 발급 체계’를 정부24와 연계할 필요가 있음. ○ 국방부가 소관 법령 및 부서의 평균치를 훨씬 상회하고 있으므로 복수차관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군인의 수당 체계를 임무 위험성·근무지·계급과 복무 연수를 반영하여 다양화하고, 자동으로 연동화하여 군의 요구가 없이도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함. ○ 가족수당과 관련해, 군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문제를 시정할 필요가 있음.

분 야	감 사 실 시 내 용
	○ 3사관학교 출신 장교의 장기 복무를 위한 군인사법 개정안이 발의된 만큼, 육군은 법 개정의 필요성을 국회에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함. ○ 학군장교와 병사 간 복무 기간이 10개월 차이가 나므로, 복무 기간 감축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간호장교는 간호 보직이 아니더라도, 여군 15% 확대 목표를 고려할 때 충분히 활용 가능한 우수 자원으로 보임. ○ 각 군의 법정 의무교육은 국방부에서 통합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장병 및 초급 간부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증액이 불가피하므로, 국방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함. ○ 초급 간부에 대해, 병사가 복무 기간 동안 받는 지원과 동일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 장성급 지휘관 공관 관리와 관련한 부사관 배치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함. ○ 육군사관학교 군무원 교수 임용 포기율 및 이직률이 약 59%로 심각한 수준이라 판단됨. ○ 사관학교 군무원 교수들의 이탈을 방지하고 우수 교수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며, 국방대학교 교수에 준하는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경찰대학교 출신 간부가 의무복무를 만료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금을 환수하는 것처럼, 사관학교 출신 장교에 대해서도 학비를 환수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한 환수 제도를 마련하기 바람. ○ 대학교 차원의 홍보활동 및 학칙 개정뿐만 아니라, 국방부 차원에서 사례 확인을 위한 신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분 야	감 사 실 시 내 용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음. ○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9월 안보지원사령부 창설 당시 보안 및 방첩 전문 인력을 약 700명 감축한 결과, 역량이 대폭 약화되었음. 이로 인해 수시 보안 점검조차 이루어지지 못하며 보안 활동이 위축되고 안보 의식이 약화되어, 중대한 기밀 유출로 이어졌다고 판단됨. ○ 윤석열 정부 이후 국군방첩사령부 역량 복원을 위해 일부 증원이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충원이 필요한 상황임. 국군방첩사령부 증원 계획에 대해 별도로 보고할 필요가 있음. ○ 전사망민원조사단을 군사망사고진상조사위원회 수준의 조직으로 개편하여 권한을 확대하거나, 군사망사고진상조사위원회를 항구적 조직으로 재출범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해외 무관 중 실적이 우수한 인원을 임기제가 아닌 정규 진급으로 처리하여, 보직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 2023년 군 내 하극상 사건이 373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만큼, 획기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군기훈련 폭증과 관련하여 육군 차원의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부대 관리 역량을 일신하며 합리적인 병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기 바람. ○ 민군 융합형 군대를 조성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 국군 병력 감소 추세에 따라 여성 자원 입대를 허용하고, 여군 비율을 높이기 위한 여성 지원병제를 현실적인 대안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분 야	감 사 실 시 내 용
	○ 국방부에서 근무하는 육군 군인 중 육군사관학교 출신이 아닌 인원에 대한 인사 안배에도 신경 쓸 필요가 있음. ○ 군인을 현업공무원으로 지정하기 위해 노력하기 바람. ○ 부사관 선발 필기시험을 폐지하지 말고 유지하기 바람. ○ 도움 및 배려가 필요한 장병 수가 6월 기준 작년 수준에 육박하고 있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전쟁기념관이 매년 공무원 노동자와의 임금교섭에서 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기획재정부의 현실에 맞지 않는 예산 편성 요구와 국방부의 무책임한 예산 수립에서 비롯된 문제로, 공무원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군 인력 구조와 봉급, 복지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구성하여 군 인력난 문제를 해결해야 함. ○ 미순직 처리된 3만 8천 명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군 간부 만족도 하락과 군 입대 가능 인구 감소를 고려하여, 군 인력 충원을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국방부 차원에서 병력 급감을 대비하기 위한 ‘미래 병역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신설이 필요함. ○ 군 복무 경험이 있는 50~60세대를 계약직이나 군무원으로 고용해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시니어 아미’ 대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군 정신전력교육 기본 교재의 역사 왜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필진, 자문위원, 감수진 구성 절차 등을 포함한

분 야	감 사 실 시 내 용
	명확한 교재 집필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보훈부가 담당하는 제대군인 관리 업무를 국방부가 맡아야 할 필요가 있음. 전역 간부와 장병들의 보직 경로에 따른 재취업 문제뿐만 아니라 병역 자원 급감으로 인한 예비역들의 역할 증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KIDA(한국국방연구원)에서 진행하는 사업타당성 조사와 관련해, 국방 분야에서는 경제성보다 우선시되는 국방적 가치를 중심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음. ○ ROTC 출신 초급장교는 28개월 복무하고, 일반 병은 18개월 복무하는 상황에서 초급장교들의 안정적인 수혈이 어려울 수 있음. 초급장교의 역할은 현장에서 매우 중요하므로, 복무기간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 병력 감소 추세에 따라 군무원 수 증가가 필요하지만, 복무 여건으로 인해 군무원의 휴·면직 상황이 심각한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군에서 지원되는 이사화물비는 지원 비용이 부족하고, 최초 임용자 및 5년 미만 근무 후 전역자에 대한 단독 이사비가 지원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 3사관학교의 2021년도 교과과정 개정으로 군사학 필수 과목들이 대폭 선택 과목으로 전환되었으며, 전환된 7개 과목 중 3개 과목은 수강 인원이 없어 폐지되고 나머지 과목의 이수율도 10%에 불과함. 군인 양성에 중요한 과목들이 다시 필수 과목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 성비위 사건으로 분리 조치된 인원 중 행위자로 지목되었으나 무혐의로 인정된 군인들은 조사 기간 동안의 필수 보직을 이수하고, 원래의 인사 상태로 회복할 기회를 제공받을 필요가 있음.

분 야	감 사 실 시 내 용
	○ 국방부 퇴직자가 유관기관 및 방산기업에 취업하면서, 군 조직의 폐쇄성, 무기 특수성, 제한적인 공급자 시장 구조로 인해 유착 관계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 대해 취업 심사 제도 개선이 필요함. ○ 군 법무관 충원율이 45%에 불과해 군 사법 기능 저하가 우려되므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국방부의 ‘국방 증명서 통합 발급 체계’가 정부24와 연계되지 않아 개선 방안이 필요함. ○ 3사관학교 출신에 대해서도 장기 복무를 허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함. ○ 대통령이 2024년 8월 국정 브리핑에서 초급간부 지원을 제고와 수당 인상을 확인했으나, 2025년 예산안에 이에 대한 예산 증액이 반영되지 않음. ○ 정부가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에 군 처우 개선과 관련된 수당 인상 방안이 반영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음. ○ 일선 부대의 중간 간부 충원률이 낮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방위력개선사업 추진 과정에서 전력지원 사업이 국방부로 이관되면서 방사청의 일괄적 추진이 어려워짐. 이에 국방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운영이 필요함. ○ 군 간부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 인력 확보 방안이 미흡한 상황임. ○ 사회적 추세를 고려하여 군 간부와 군무원 정년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사이버범죄, 마약, 딥페이크 등 신종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국방부 차원에서 대비책을

분 야	감 사 실 시 내 용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직업군인을 위한 비과세 금융상품이나 전용 신용카드와 같은 금융상품 도입을 위해 금융당국과 협의할 필요가 있음. ○ 여군 복무 환경과 복무 여건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 미국의 QRMC와 같은 군인 보상 평가서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군인 보상 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과 대책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국방부 직할 부대가 28개로 과다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지휘가 어려운 상황임. ○ 대규모 국군의 날 행사가 연례적으로 개최되면서 8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고, 민간기업으로부터 후원을 받는 등의 문제와 함께 사관생도들이 수업일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함. ○ 진급 적체를 해소하고 인력을 장기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소수 획득, 장기 활용’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총원 기반 부사관 인력관리 방식 도입이 부사관의 양적,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임. ○ 부사관 지원을 제고를 위해 부사관 수당을 신설하고, 기존 수당 인상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순직 1·2·3형 통합을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제안을 고려하여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군무원의 신분에 맞는 근무 환경과 업무 범위를 재정립하고, 군과 구분되는 직무에 대한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여 합리적인 근무 여건 조성을 추진해야 함.

분 야	감 사 실 시 내 용
	○ 주임원사의 직책에 상응하는 적정 금액 인상을 통해 원활한 활동 여건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 특수지 근무수당 가산금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부족하다면 가산금 증액에 필요한 예산을 추산하여 의원실에 별도로 보고하기 바람. ○ 현재 특수지 근무수당 가산금 수준은 장병들의 노고에 비해 부족하다고 판단됨. ○ 국군 수당 중 정액 급식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수당이 과세 대상이므로, 실제 급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함정 근무와 같은 고위험 직무에 대한 수당 인상을 포함한 실질적 보상 방안 마련이 시급하며, 특히 현업 공무원 제도 도입이 필요함. 이를 위해 국방예산 편성 과정에서 처우 개선 항목을 충분히 반영해야 함. ○ 군무원의 채용 계약서에 명시된 임무가 불분명하여, 비전투 인력임에도 전투 인력처럼 운용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군무원의 임무와 역할 확대에 따라 처우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함. ○ 대대급 지휘부 운영비와 참모부 운영비가 과소 편성되어 있는 문제가 있음. ○ 군사문제연구원 원장의 정치적 편향성이 우려되므로 조속한 인사 조치가 필요함. ○ KIDA(한국국방연구원)의 업무가 과중한 상태임. 인력 정원이 부족하고 사업 타당성 조사를 다수 진행하고 있어 인력 보충 대책 마련이 필요함.

분 야	감 사 실 시 내 용
	○ 군인·군무원의 당직수당이 일반 공무원 당직수당에 준해 지급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경찰·소방 기준에 준해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추진하기 바람. ○ 장병들이 채무 문제로 인해 임무에 전념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지휘관이 부대 관리 차원에서 장병의 채무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병사 월급이 가파르게 상승한 만큼, 비전투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병 대상 경제 교육을 강화해야 함. ○ 군무원의 역할 확대에 따라 처우 개선과 인력 운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 바람. ○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사업 타당성 조사 수행기관으로서 원활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추가 인력 확보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정부 긴축재정 기조 속에서도 군 간부 처우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른 항목 조정 등을 통해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민간 군사기업 제도화와 관련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 법 제정, 제도 도입을 위한 국방부 주도의 범정부 TF 구성이 필요함. ○ 감독관과 특정 업체 간 유착 방지를 위해 근무자 순환보직 등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사회 변화로 인해 자녀 부양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군인의 정년 연장 및 안정성 보장 방안을 마련해야 함. ○ 병역 자원 감소와 숙련된 군 인력이 충분히 더 복무할 수

분 야	감 사 실 시 내 용
	있음에도 정년에 막혀 퇴임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무원 정년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장기간 숙달이 필요한 임무(항공기 정비 등)를 위해 젊은 나이에 군을 떠나는 인력을 군무원으로 우선 채용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 ○ 특수병과의 경우 최저 복무 기간을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국방부에서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의무후송대대와 같은 가혹한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들의 초과근무시간 확대 적용 여부를 총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대급으로 편성된 의무후송항공대를 대대급 이상으로 확대·개편하고 참모부 인력을 보강할 필요가 있음. ○ 국방정보본부의 핵심 현용 사령부는 합동참모의장 직속으로 할 필요가 있으므로 국방부와 갈등 없이 우리 정보역량이 재구축될 수 있도록 협력할 필요가 있음.
감사 및 조사	○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위증한 것으로 보이므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 15조에 따라 고발 조치가 필요함. ○ 암구호 유출에 대한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낮으며, 군사기밀 유출 방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군의 마음건강 서비스 운영과 관련해 군사기밀 유출 및 비리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관련자와 문서를 포함한 보고서를 국방부 차원에서 제출하기 바람. ○ 채상병 사건과 관련하여 국방비서관과 해병대사령관 간 통화 내용 공개가 필요함. ○ 9.19 군사합의 직후 한강 하구 남북 공동 수로조사를 통

분 야	감 사 실 시 내 용
	해 작성된 해도가 2020년 9월 3급 비밀로 분류되었으나, 초기에는 문제 없다는 입장이 있었음. 이에 대한 경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감사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비밀 해제와 일부 문서 공개는 정쟁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 GP 불능화 여부에 대한 부실 검증 가능성이 제기되며, 당시 정부와 군 수뇌부의 목살 또는 왜곡이 있었다면 국제사회에 기만 행위를 한 것으로 비판받을 소지가 있음. ○ GP 철거 관련 유엔에서 모범 사례로 선정된 바 있지만, 비밀 해제와 공개는 여론몰이로 보일 가능성이 있음. ○ GP 부실 검증 의혹에 대해 이미 언론 및 합동참모본부에서 논의된 사항으로 새로운 사실이 없음에도 장기 감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무리한 감사라고 보임. ○ 이전 정부의 GP 파괴 당시 합참 발표가 완전 파괴됐다고 했으나, 문서와 영상을 통해 부실 검증된 부분이 발견됨. 축소 또는 허위 발표와 관련된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후속 조치가 필요함. ○ GP 관련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군사기밀과 감사 결과를 공개한 점은 부적절하다고 보임. ○ 10월 8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GP검증단 요원의 제보 내용이 기밀 유출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제기되므로 이에 대한 수사가 필요함. ○ 마음건강 앱이 전문적이지 않은 연구기관에 의해 개발되었고, 연구 책임자가 비전공자로 확인됨. 또한 개인정보 동의 여부 및 효과성 평가가 불분명하므로 개선이 필요함.

분 야	감 사 실 시 내 용
	○ 폭발물(화약) 공장 이송 과정에서 주민과의 마찰로 국민 생명과 안전이 위협될 가능성에 대한 대책을 제출하고, KDI와 주민 간 소송 상황을 보고하기 바람. ○ KF-21 관련 수사가 인도네시아와의 외교적 마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한-인도네시아 관계를 고려해 수사 조기 종결이 필요함. ○ 군 내 가상화폐 거래 중독 문제에 대한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IRIS-T 미사일 제조사인 딜 디펜스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함. ○ 전 국방연구원 원장의 해임 처분이 법원에서 위법하다고 판결되었음에도 국방부가 재소한 것은 문제임. ○ 북한에 전달된 해도와 관련해 제작 및 전달 경위, 심의 생략 여부, 보안성 검토 여부 등을 조사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음. ○ 육군 복지시설 운영 관계자들의 오랜 관행으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방부가 기관 감사를 적극 검토해야 함. ○ 군 내 하극상 범죄가 5년간 1666건 발생한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 수도병원에서 장기 안치된 미인수 시신 9구에 대해 사망 원인을 규명할 필요가 있음. ○ 군 내 마약 범죄의 근절을 위해 원인 분석과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함. ○ 국방부 차원에서 감사 시스템 개선, 통합 교육 체계 재정립, 우수 감사관 선발, 감사 활동 법적 보장 등을 강화해

분 야	감 사 실 시 내 용
	야 함. ○ 정보사령관과 산하 900여단장의 갈등은 부적절함. ○ 정보사령부 지휘관 간 분열은 군사정보발전연구소 민간단체의 무단 안가 사용 제안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임. ○ KIDA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문제가 식별된 인원에게 보직을 지속 부여하고, 채용 비리가 확인된 인원에게 조치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문제임. 국방부 차원에서 조치가 필요함. ○ 지하구 소방 공사 완료 시까지 철저히 관리·감독하며, 불법 하도급 의혹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함. 불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함. ○ KIDA(한국국방연구원)에서 진행하는 사업타당성조사에 대해, 국방과 관련되는 체계에 있어서는 경제성 뿐만 아니라 더 우선시되는 국방의 가치를 보고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
보건복지 및 제대군인 지원	○ 헬리콥터 후송 원칙을 거리 기준에서 병원의 의료수준까지 고려하는 방향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 군인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자율형 공립 고등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이 필요함. ○ 월남전 참전자 중 전투군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군인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특별보상을 할 필요가 있음. ○ 국군 장병들의 청각장애 피해 인정에 대해 산업 기준이 아닌 자체적인 보상 기준을 도입해야 함. 이명과 난청 피해자들이 정당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증명 절차를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도와야 하며, 엄격한 보상 기준을 보훈부와 협력해 마련할 필요가 있음.

분 야	감 사 실 시 내 용
	○ 군인 자녀에 대한 정부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견에 대해, 군인 자녀 초·중·고등학교 단계별 새로 추진할 대책에 대해 설명안을 제출하기 바람. ○ 아파치 헬기 원점 재검토 시, 비용 4.7조 원을 장병 복지에 사용하는 것이 필요함. ○ 국군의무사령부의 ‘군 응급환자 신고앱’은 2건 이상의 응급환자에 대한 동시 대응이 불가하므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해 보임. ○ 의무후송대를 항공사령부 예하에서 국군의무사령부 예하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성희롱 피해 상담률은 늘어난 데 비해 신고율은 오히려 줄어든 바, 제대로 된 원인 파악과 후속 조치가 필요함. ○ 군의 한의학 수요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한의군의관 TO 증대 및 한의과대학 위탁교육 필요성에 대한 국방부 입장을 보고하기 바람. ○ 재원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월남전 참전 군인에 대한 금전적 국가 예우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군 마트에서 판매하는 담배 종류가 선호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심의 과정 및 기준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외국계 담배 및 쉐련형 전자담배를 입찰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보고하기 바람. ○ 1984년 9월 30일 이전에 퇴직한 참전 군인에 대해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할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초급 간부 생활보조대출 금리 인하를 적극 검토하고 다양한 제도 및 상품 개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분 야	감 사 실 시 내 용
	○ 의무사관학교 설립 시 수도병원을 포함한 군병원의 교육 및 실습 수요 대처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6·25 참전 소년·소녀병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군인 자살 문제 및 자녀 교육과 주거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므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제대군인 취업 지원을 국방부에서 담당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로카우스 이용 요금이 높아 일반 장병과 제대군인의 이용이 어려운 상황임. ○ 장기 군의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가 필요함. ○ 장병 복지를 위해 사용해야 할 군인복지기금 8,518억 원 중 1,012억 원이 군 골프장 운영에 사용되는 것은 과도하므로, 민간에 골프장 관리를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초급 간부 처우 개선 측면에서 장병내일준비적금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군 의료인력을 민간에 파견한 사이 군인들의 민간병원 의존도가 높아진 상황이므로, 군 의료 시스템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강화도 주민들의 소음 피해에 대해 강화도를 피해 지역에 포함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피해 주민에게 이를 알리며 지원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의무후송헬기가 3개 지역에 2대씩 배치되어 계류장에서 대기 중이며, 근무 인원의 피로가 높은 상황임. 대기장소

분 야	감 사 실 시 내 용
	에 숙소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주거·부대 및 시설 이전 등	○ 6월에 발의된 통합신공항 특별법 개정이 필요한데, 국방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람. ○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지자체 차원에서 진행하기에는 열악한 재정 상황, 고금리, 리스크 부담 등을 감안했을 때 사업 진전이 더딜 것임. 정부 차원의 지원을 포함한 사업 방식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 2024년 12월까지 대구시가 군부대 이전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예비후보지 발표 이행을 서둘러 주고, 추진과정에서 해당 지역과 상생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며 지역 주민들과 긴밀한 소통이 필요함. ○ 캠프 마켓 관련 정화사업의 지연 이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북한의 오물풍선이 대통령실에 들어왔는데, 이는 대통령실의 방공체계와 관련된 문제로 당시 대통령실 이전 TF 부단장이었던 현 국방부장관의 통상 해임 사유라고 보아야 함. ○ 대통령 관저 이전을 위한 육군참모총장 공관 공사와 관련하여, 소관 기관도 모르는 공사가 어떻게 진행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상세한 경위와 해당 공사를 입증할 수 있는 문건 목록을 제출하기 바람. ○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국방 시설 연쇄 이전으로 인한 예산 낭비가 발생하고 있음. ○ 광주시민의 오랜 염원인 무등산 정상부의 완전한 개방과 세계적 유산인 무등산의 복원을 위해 방공부대 이전이 필요함. ○ 여군 입대를 확대하기 위해 복무여건 개선 및 필수시설

분 야	감 사 실 시 내 용
	확대가 필요한데, 여군 전입 시 필수시설을 긴급 운용할 수 있도록 예비비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이전된 부대의 타운화가 문화, 교육 등 여러 면에서 신도시나 혁신도시와 같은 이점을 제공할 경우 초급 간부 근무 여건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 ○ 국방혁신 4.0을 통해 구식무기체계를 첨단무기체계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무등산 방공포대의 추진계획을 의원실로 설명하기 바람. ○ 국방부, 합참, 연합사 등 중견 간부들에 대한 생활 여건이 미흡하여 개선이 필요함. ○ 국군 춘천병원 개편사업과 관련해,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가 작성된 하도급업체의 경우 국방부가 잘못하여 원청업체에 지급한 하도급업체 공사비는 국방부가 원청업체에 반환청구하고, 하도급업체의 공사비는 조속히 지급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를 작성한 기업에 대해 조속한 공사비 지급 방안을 강구해야 함. ○ 매각되지 못한 반환 미군기지 면적이 여의도 면적의 18배에 달할 정도로 여전히 막대한 부지가 매각되지 않았는데, 국방부가 파악하고 있는 원인과 현재까지 추진 상황, 향후 대책 마련이 필요함. ○ 군부대 해체, 통폐합 등에 따른 접경지역 경기 침체에 대한 분석 자료가 있는지 여부와 접경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한 국방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최근 5년간 전국의 퇴거지연 벌금 납부자가 4,3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전국 관사를 전수조사

분 야	감 사 실 시 내 용
	하여 규정을 어기며 버티는 퇴거불이행자에 대한 조치와 규정 개선이 필요하며, 형평성에 맞는 관사 운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롯데타워 건설로 인해 성남 서울공항의 각도가 변경되면서 규제지역으로 전환된 지역은 규제가 바로 적용되었으나, 반대로 규제가 해제된 지역에 대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 ○ 용산 미군 잔류기지 신기지 건설이 3~4년 이상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 미군기지 반환, 용산공원화 계획, 서울 도심 개발 등이 연쇄적으로 지연되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우려가 있음. ○ 육군사관학교 드론 실험장 추진과 관련해, 주변 민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56탄약대대가 북한군의 장사정포 거리 이내에 있고 도심 발전 지역에 위치하므로 이전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3기 신도시 고양 창릉지구 조성 계획이 군사시설로 인해 차질을 빚고 있으므로 국토부, LH, 국방부 간 신속한 협의가 필요함. ○ 향후 정부가 공공택지지구 개발 등 중요 정책을 시행할 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군 시설과 관련된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함. ○ 갈매역에서 별내역 사이 구간의 군용철도 이전에 대해 검토가 필요함. ○ 중견간부 이탈방지를 위한 전세대부와 공공임대사업 확대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군수관리·	○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이 폭증한 상황에서, 음식물 쓰레

분 야	감 사 실 시 내 용
시설관리	기 감소를 위한 식사지도 등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 「군 급식품목 계획생산 및 조달에 관한 협정서」의 취지에 따라, ‘지역단위 조합’이 군 급식 납품의 주체가 되어야 하며, 중앙회는 이를 지원하고 조합이 여력이 되지 않는 경우에만 군 급식을 납품하는 역할이 필요함. ○ 군 내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므로, 급식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음. ○ 군 급식 이물질 발생에 대한 국방부의 견해와 현재 추진 중이거나 향후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 ○ 군 영양사 확대 계획 및 영양사 고용 등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급식비 인상에도 불구하고 만족도가 감소하고 있어, 국방부는 급식비 인상 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식자재 인상률을 고려하여 군 급식비도 이에 맞추어 인상할 필요가 있음. ○ 동명부대의 군수물자 반입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였으므로, 해외 파병부대의 물자 반입 및 반출 절차에 대한 매뉴얼 재정비가 필요함. ○ 군 건축물 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여전히 존재하며, 장병들의 건강을 고려할 때 석면 함유 건축물 제거를 지체할 시간이 없음. ○ CCTV 등 장비 도입 시 국산 여부를 평가하는 방안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군에 납품된 CCTV에 중국산 부품이 발견되어 1300여

분 야	감 사 실 시 내 용
	대가 철거된 사건과 관련하여 보안성 검토가 미흡했다는 문제가 있음. ○ 해상풍력발전사업 추진 시 중국산 기자재 사용으로 인해 군 함정과 잠수함의 작전 범위가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방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수립하기 바람. ○ 해상풍력발전과 관련하여 준비해야 할 연구용역을 조속히 추진하기 바람. ○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사능 작전세트를 조기에 보급해야 함. ○ 수명 연한을 초과한 노후 장비를 최대한 빠르게 교체하기 바람. ○ 장병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원적외선 난방 기술의 확대 도입을 검토하기 바람. ○ 군 급식 공급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식량안보를 위해 2025년 이후에도 수의계약 비율을 70% 이상으로 반드시 유지해야 함. ○ 군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영세한 시외버스터미널에 온라인 예매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우리 군의 예산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콜드체인 감시라벨’ 시범사업 결과 유효한 효과 도출이 제한된다면, 군단급 확대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도록 추가 검증할 필요가 있음. 확대 시범사업 적용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 식자재 신선도 유지를 위해 유통 과정에서의 관리 강화가 필요함.

분 야	감 사 실 시 내 용
기 타	○ 오만불손한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에 대해 경질을 건의할 필요가 있음. ○ 최근 발생한 대리입영 사건에 대해 병무청장과 장관은 국민께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해야 함. ○ R&D 비용을 줄일 게 아니라 R&D 평가 구조를 바꿔야 하며, R&D에 국방부가 자주 개입하는 순간 본질을 놓칠 수 있다고 보임. ○ 과학기술전문사관 제도는 2026년에 설립될 예정인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의 목적·기능과 상당 부분 중복되므로 제도의 통합이 필요해 보임. ○ 한강 작가의 저서가 진중문고 심의도서에서 미선정된 바, 진중문고 선정과정의 회의록 및 심의의결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관세청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유사한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이와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세담당 실무자들에 대한 교육 강화와 같은 구체적인 방지책이 필요함. ○ 국방부는 방위산업 전시회에서 의도적으로 DX KOREA를 배제하고 KADEX를 지원한 바 있음. ○ 국방, 안보를 정치적 이익을 위해 활용하지 않아야 함. ○ 독립군과 광복군을 계승한 우리 국군의 건군연도를 시정하기 바람. ○ 무기체계 성능 개선 및 보강을 위한 예산을 전력운영비 대신 방위력사업비로 편성할 수 있는지 검토하기 바람. ○ 성희롱으로 인해 분리조치된 인원 중 무혐의로 처리된 행위자에 대한 지원 제도가 필요함.

분 야	감 사 실 시 내 용
	○ 국방혁신 4.0의 내용과 개념, 이행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바람. ○ 장병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내용 중 “우리나라가 힘이 없었기 때문에 일본에게 점령당했다”라는 내용은 뉴라이트 사관과 정확히 일치함. ○ 우리 군이 미래 과학기술 발전과 수출을 주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육일기를 계양한 자위대함의 입항을 용인하는 등 안보를 평계로 한 역사 지우기를 중단하기 바람. ○ 국방부는 정치적 보복성 소송을 중단하고 정당 정책개발에 연구원의 조력을 양성화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함. ○ 개정된 군사법원법은 군의 폐쇄적인 환경과 상명하복 문화로 군 수사기관, 군사법원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 취지인데 이첩 소요 기간을 볼 때 취지를 반영했다고 보기 어려움. ○ 국방부가 「대 국회 및 정당 업무처리 훈령」을 전부 개정해 의원실 자료제출 요구 절차를 까다롭게 바꾼 사유와 법적 근거의 제출이 필요함. ○ 김용현 경호처장과 방첩사, 수방사, 특전사령관의 공관 회동,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총암고 선후배 관계로 군내 요직 차지 등 계엄령 발령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 현 정부는 국내 정치적 위기 상황을 회피하거나 모면하기 위해 북의 도발 국면이나 우크라이나 전쟁 등 안보 위기를 신북풍으로 이용해 국면 전환용으로 활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정 필요.

분 야	감 사 실 시 내 용
	○ 행정안전부장관의 방첩사 방문의 목적 및 식사비용 처리 방식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경호처장 주재로 방첩사령관,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등이 모임을 갖게 된 경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김용현 국방장관이 경호처장으로 재직 시에 비밀리에 방첩사 사령관 등 관계기관 지휘관들과의 모임을 가진 것은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음. ○ 군내 리튬배터리 화재 및 폭발에 대해 대비가 필요함. ○ 해양방사능 측정임무 관련해 세습이 검출된 적이 없다고 허위정보를 보고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군 내부에서 발생한 대형 보안사고를 고려할 때, 외부보다는 군 내부의 보안체계 개선이 더 시급함. ○ 교정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군무원, 부사관을 채용·양성하는 방안, 운영을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방안, 법무부 교정본부가 인원을 파견해주는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헌혈, 다자녀, 공인 영어성적 같은 군 입대와 관련없는 가산점을 줄이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교육부와 협조하여 ‘대학 4학기제 도입’, ‘군 복무 학점 인정제 도입·확대하는 학교에 인센티브를 제공’ 하는 것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무기 제공 본격화 가능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전쟁기념관 시설의 노후화로 수장고, 도서관 등의 개보수가 시급함. ○ 전쟁기념사업회장의 연봉 인상률이 10%에 달하여 기획재

분 야	감 사 실 시 내 용
	정부의 연봉 인상률 2.5%를 초과하여 부적절함. ○ 국방R&D과정에서 실패에 대하여 감점만을 부여하는 과정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 대통령실의 국방부 이전과 관련하여 국유재산종합계획의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육군의 복지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특정 군 관계자 및 그 가족들에게 운영티가 과다하게 배분되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국방부 감사관을 통한 기관감사가 필요함. ○ 국방부장관이 국민 세금으로 대응태세 ‘즉강끝’ 을 새긴 골프공을 제작해 배포한 행위는 부적절함. ○ 사이버사령부가 우리의 군과 관련되고 우리 안보와 관련된 침해 사례가 있는 것을 모니터링·수집·대응도 미흡한 문제점임. ○ 정신전력원이 정훈장교들에 대한 교육 교재들 중 일부만 보관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음. ○ 국방혁신 4.0과 관련하여 개념과 교리 등 준비가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함. ○ 국방통합데이터센터 관련 데이터 보전 등의 측면에서 백업시스템 보강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설립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해도, 과학기술전문사관 및 사이버전문사관 제도처럼 장기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보임. ○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운영과 별개로 이미 군에서 장기자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학사학위 이상 학위를 소지한 장병들을 위해 전문교육과정이 필요함. ○ 과학기술인재 육성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과 함

분 야	감 사 실 시 내 용
	께, 군사과학기술대학원 설립 추진을 검토하여 의원실로 보고하기를 바람. ○ KDS가 신청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와 KDI가 신청한 환경영향평가가 동일회사에 의해 동일목적으로 신청되었으며, 환경평가법을 기만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하여 관련 내용을 확인하여 제출하기 바람. ○ 국회는 행정부의 무제한적인 무기 지원 및 대여에 대해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법 개정안 발의하였고, 행정부는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K-방산의 수준에 걸맞는 무기 수출·양도 체도를 발전시켜야 함. ○ 공인인 현 국방위원이 현재의 안보 상황을 대북 심리전으로 이용하자는 취지의 문자를 안보실장한테 보냈고 안보실장의 긍정적 답변이 있었음. 이러한 논의는 국민 안전 차원에서 부적절하므로 상황에 대해 전면 공개하고 당과 국회에서 조치를 취해야 할 상황으로 보임. ○ 국방위원의 문자 내용은 군에 몸담아 왔던 전문가로서 심리전이라는 용어가 정치적인 의도가 아닌 북한군의 사기 저하 차원의 용도로 보이고, 사적 대화에 대해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임. ○ 국방위원은 4선의 여당의 중진이고 전임 국방부 장관은 현직 안보실장이므로, 일촉즉발의 남북관계가 있는 상황에서 문자 내용을 단순히 사인 간의 대화로만 볼 수 없는 중차대한 사안이므로, 발생해서는 안되는 상황으로 보임. ○ 군인 자녀 자율형 공립고를 특별로 바라보는 시선이 없도록 군인 가족들의 어려움과 열악한 교육환경을 알려야 하고, 수요에 턱없이 모자란 공급으로 간부 간 박탈감이 발

분 야	감 사 실 시 내 용
	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기 바람. ○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군 급식 방침」에 명시되어 있는 지역 농산물 우선 구매 조건 이행을 위한 국방부 및 군 당국의 구체적인 방안 제시가 필요함. ○ KIDA 장기근속 연구 인력에게 보국훈장 수여하는 등 국가안보와 방산수출 발전의 숨은 주역들의 헌신과 노고에 보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바람. ○ 24년 9월 추석 연휴기간 기품원 해킹 관련 원인, 피해규모 및 은폐 의혹 규명해야함.

2. 합동참모본부

분 야	감 사 실 시 내 용
전력기획 및 방위력개선	○ 평화관리의 실패가 곧 전쟁이고, 평화는 목적이 될 수 있지만 전쟁은 결코 목적이 될 수 없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음. ○ 한미일-북중러 대립 구도는 북한이 유엔제재를 우회하여 살아남을 수 있는 틈을 만들어 주고 그에 따라 비핵화 협상에 나올 요인을 줄어뜨리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음. ○ 합동참모본부는 평화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최고의 목표와 최고의 성과라는 점을 늘 염두에 두고 작전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일본의 군사적 영향력 확대와 관련해, 국가 간에 서로 협력하고 관계하는 것은 자국의 이익 때문이지 시혜적 의미는 없는 점을 고려하여 철저하게 자국 이해 중심으로 사고하는 것이 필요함. ○ 군단급 무인항공기(UAV)에 대한 신속한 전락화가 필요함. ○ 전투체계와 방산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설계될 필요가 있음. ○ 일본과의 군사협력 수준의 향상은 용납할 수 없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음. ○ 합동참모본부는 군령의 최상위 제도로 작전 개념을 정립하고 관련 지침을 하달하며 그 시행여부를 감독할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합동참모본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 인구절벽 시기에 징집병력이 줄어드는 점을 고려하여 경계 개념의 변화가 필요함.

분 야	감 사 실 시 내 용
	○ AI 기반 과학화 경계 체계를 시범운영 중인데, 합참에서 작전 개념이 적용될 수 있는지 및 요구성능은 제대로 충족하는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 GOP경계작전부대의 고정식 운영과 관련하여 경계작전의 효율성과 장병들의 복무여건이 잘 조화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일본이 군수지원협정에 더하여 주한미군기지 사용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합동참모본부는 우리의 영토수호 및 국민의 동의 없는 미군기지 사용 불허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음. ○ 일본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협조할 건 해야 하고 일본이라고 절대 안 된다는 논리는 국익에 반하는 논리인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음. ○ 전시작전권 이양문제는 군사영역이 아닌 정치·외교영역에서 풀어야 할 문제로 보임. ○ 이스라엘-레바논 간 전쟁 중이므로, 동명부대의 방호 능력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의 정보 역량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내부의 스파이 축출 능력도 갖출 필요가 있음. ○ 경계작전 개념에 대한 명확한 재정립이 필요함. ○ 프리덤 예지 훈련에 대한 사후검토회의를 합동참모의장이 직접 주관할 필요가 있음. ○ 항공모함 예산이 반영되었음에도 추진되고 있지 않는 것은 문제임. ○ 북한의 핵잠수함 추진과 관련하여 우리도 핵잠수함의 필

분 야	감 사 실 시 내 용
	요성에 대해 합동참모본부에서 주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한국형 아이언돔의 전력화 시기를 앞당기는 노력이 필요함. ○ 국방 데이터를 AI 기반으로 신속히 구축하고 분류해야 신뢰성 있는 AI 운용이 가능함. ○ 국방혁신 4.0 목표 기한이 2040년이라고 볼 때, 데이터 분류와 통합에 대한 작업이 조기에 착수될 필요가 있음. ○ 해안 정찰용 무인항공기 사업과 관련하여 과도한 성능 요구로 인한 사업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실시간 범위 설정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 서북 도서 지역에 과학화 경계작전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곳이 있으므로 해병대의 소요 제기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갖기 바람. ○ 경계작전 개념 변경 시 유엔군사령부와 협조할 것이 많으므로 민간군사기업(PMC) 등을 통해서 잘 정리하기 바람. ○ AI를 전군 모든 시스템과 지휘체계에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확보 문제, 할루시네이션 문제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군의 최우선 목표는 강력하게 평화체제를 끝까지 유지하는 전쟁 억지가 되어야 함. ○ 북한의 핵 잠수함은 핵무기 탑재 잠수함으로, 더 임박한 위협이 되므로 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일본의 KADIZ 진입시간을 기록하지 않고 있는 바, 광개토대왕함 초계위협 비행사건 등을 고려하여 지침 시정이 필요함.

분 야	감 사 실 시 내 용
	○ GOP과학화경계시스템 오경보 횡수가 월 일정 회수 초과 시 업체 입장에서는 시스템 성능불량 문제로 변질 수 있어 묵시적으로 비정상경보로 처리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군사대비태세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임. ○ GOP과학화경계시스템의 오경보 기준을 국제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으로 바로잡고 더 강화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군 시험평가단에 의한 철책선에서 다양한 적 침투 상황 시나리오에 따른 감지 시스템 유형별 극소화 여부를 철저히 평가할 필요가 있음. ○ 적과 직접 대치하는 GOP 철책은 최고 수준의 방호 성능이 요구되므로, 탄약창 등과는 차원이 다른 시험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오경보 극소화 여부를 철저히 평가할 필요가 있음. ○ 북한의 통지 등 연락이 합동참모본부에 즉각 보고될 수 있도록 보고체계를 정비해야 함. ○ 3축 체계를 통해 확보한 北 핵·미사일 정보가 한·일간 체결된 군사협력으로 미국을 통해 일본으로 공유되는지 여부와 정보의 범위, 공유체계를 구체적으로 보고하기 바람. ○ 사이버작전사령부가 과거 비판은 수용하되, 현재 위협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바탕으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소형 드론에는 소모성 개념을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손망실과 불용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장기적이고 소모적인 행정 조치를 방지하기 위한 관련 규정을 고민하기 바람.
대북대비태세	○ 북한 국방상으로 임명된 노광철과 총참모부 부장으로 임

분 야	감 사 실 시 내 용
및 경계태세	명된 이영길은 전략가로서, 대한민국을 상대하는 전략과 작전계획 및 상황이 변할 것이므로 잘 주시하기 바람. ○ 평양에 추락한 무인기에 대해, 북한이 국군의 날에 공개된 무인기를 복제해서 자작극을 펼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임. 이는 김정은 정권에 대한 주민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한 북한 정권의 내부통제 목적으로도 보임. ○ 오물풍선은 국민재산에 피해를 입히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중대하게 위협하고 있음. 이는 우리 군의 작전 피로도를 누적시키기 위한 북한의 도발 수단으로 보임. ○ 북한은 대한민국의 안보 약화, 남남 갈등 유발 등을 피할 것이므로 북한에 대해 명확한 힘에 의한 방어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음. ○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 GPS 교란 및 오물·쓰레기 풍선 등 도발행위에 대해 단호한 대처가 필요함. ○ 한미일 3자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각서가 한·미·일 간 군사협력의 제도화를 촉진하여 북한의 전쟁 도발 가능성을 더욱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음. ○ 대북메시지와 관련하여 북한의 저속한 메시지에 저속하게 대응하는 것은 군정의 영역으로 넘길 필요가 있음. ○ 북한의 의도된 심리전에 휘말리지 말고 적의 도발에는 반드시 3축 체계를 가용하고 한미동맹의 확장억제 체계를 통해 대북 억제 능력과 태세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군이 북한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과 관련하여 정부 성향을 고려하지 말고 올바른 대북 개념을 갖고 있어야 하고, 적의 도발이 있을 때에는 자위권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조치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분 야	감 사 실 시 내 용
	○ 북측의 대남통지문 통보시 유엔사 통보와 관련하여 유엔사령부 통보와 합동참모의장의 보고 시점 간 차이가 발생하므로, 신속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미국 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전쟁 시나리오를 두 가지 제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음. ○ 북한의 오물·쓰레기 풍선에 대한 무력화 방안으로 드론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합동참모본부는 전쟁의 억제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기본임무인 점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음. ○ 북한의 핵·WMD 고도화와 관련하여 위기관리가 필요한 시점인데, 대북전단 및 오물풍선에 대해서도 위기관리 측면에서 고려가 필요함. ○ 전쟁을 잊어버리면 나라가 위험해진다는 점을 합동참모의장과 장병들 모두 명심할 필요가 있음. ○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하여 항공안전법에 따라 승인절차가 준수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북한에서 오물풍선을 지속적으로 날린다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됨. ○ 미국과 한국의 안정적인 외교·군사적 채널이 없는 것도 하나의 전쟁 발발 가능성의 요소로 판단됨. ○ 오물풍선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은 대화를 통한 상호 간의 통제라고 생각됨. ○ 대북전단 문제와 관련하여 민·관·군 통합방위체제 하에서 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테이블을 마련해

분 야	감 사 실 시 내 용
	이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조율할 필요가 있음. ○ 북한이 러시아제 수송기를 공중조기경보기로 개조 중이라는 것과 관련하여 북한의 운영능력 및 우리에의 위협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오물풍선에 대해서 군사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군사적 대응 및 무력충돌의 우려가 있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음. ○ 대북확성기 설치장소가 GOP일대인지, 비무장지대 인지 확인해서 보고 바람. ○ 오물풍선에 대한 원점타격 시 규모에 따라 전투,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있는 점을 명심하기 바람. ○ 오물풍선에 대한 국민들의 불편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통합방위협의회를 활성화하여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는 노력이 필요함. ○ 평양 상공에서 벌어졌던 무인기를 통한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하여 국방위원들에게 성실히 보고하기 바람. ○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시 포획 드론을 적극 활용하기 바람. ○ 북한이 적국이라는 점에서 한강 하구 해도 전달이 누구와 무엇을 위한 조치였는지, 합동참모본부가 진단해 볼 필요가 있음. ○ 우리 시민단체의 대북전단 풍선 미승인 비행은 과태료 부과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관할 부대가 이를 11차례 보고받고도 신고하지 않은 것은 법률에 명시된 의무를 방기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정전협정 관리에도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보임.

분 야	감 사 실 시 내 용
	○ 500개 가량의 국가중요시설 중 안티 드론 체계가 설치된 시설이 6% 미만임. 드론 대비를 위해 안티 드론 체계 설치율을 높일 필요가 있음. ○ 평양에 나타난 무인기의 출처를 전략적 모호성에 숨어서 밝히지 않는 것은 부적절해 보임. ○ 민간인 출입통제선의 복상을 합동참모본부에서 다시 검토 해주기를 바람. ○ 수도권 방어를 위해서 고고도에 대해서는 취약한 상황이므로, 이에 대비한 전력화 작업을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 북한의 생물학 무기 고도화와 관련하여, 먼저 북한의 기술 수준과 생화학 무기 위협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필요함. 아울러 군 차원의 생물학 무기 분석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백신 개발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역량 고도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北 생화학 공격 대비 생존성 향상을 위한 물자 확보에 있어서, 업체 생산능력과 예산상 한계 등을 고려하여 우선 순위에 따른 보급이 필요함. ○ 군 부대 드론 불법 침입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는 각 군의 보안성과 불법 드론에 대한 대응이 부실하다는 것을 의미함. ○ 북한 등 주변국으로부터의 인지전 위협이 상존하는 상황에 대한 위협 평가와 사이버작전사령부의 대응 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합동성 강화 및 조직운영	○ 드론작전사령부는 북한의 핵심표적에 대한 ‘센서 투 슈터 (Sensor to Shooter : 탐지 및 정밀타격)’ 로써 전략적·작전적 임무수행을 운영 개념으로 하고 있으며, ‘센서 투

분 야	감 사 실 시 내 용
	슈터'로서 가장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탐지 능력이라고 생각함. ○ 과학화 경계체계 구축이 10년 전부터 이어져 현재 미비점을 보완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병력을 줄일 여건이 마련되었다는 의견이 있고, 여기에 AI·드론·로봇 등 첨단 기술을 접목시켜 국방부 차원의 병력 절약을 시도할 필요가 있음. ○ 합동참모의장을 미국과 같이 비통제형으로 군령을 보좌·자문하는 기구로 만들고, 합동군사령부가 전반적으로 전·평시를 지휘하며 독자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군 병력 규모는 줄어드는 추세이나 합동참모본부 산하에서 2개의 사령부가 새로 창설되며 장성 수는 증가하고 있음. ○ 드론작전사령부의 원거리 데이터링크 기반 소형 드론들이 조기에 전력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대테러 기관단총과 관련하여 육군 특전사와 합동참모본부 제출자료가 상이한 문제가 있으므로 공문서 위조 등 조사가 필요하고 사용실태를 점검하며, 사업담당자의 전역 후 납품업체 취업, 특전사 실무자 전출 등에 대한 진상조사가 필요함. ○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간 대러·대중 전략 주안점의 근본적인 요소가 달라지고 있다고 보이므로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사이버 전문인력의 임관율이 저조하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군부대 민간 드론의 침입 사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

분 야	감 사 실 시 내 용
	요가 있음. ○ 합동참모본부 이전 예산을 방위력개선비가 아닌 일반회계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질의함. ○ 합동참모본부의 육사비율 조정 및 주요 보직 제한 등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전략사령부의 순환보직 문제에 대해 국군조직법 개정, 예산배정 등이 먼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댓글요원의 진급에 대한 실상 파악, 책임자 엄벌 및 재발 방지대책 마련이 필요함. ○ 직할부대 방문 및 점검 등 부대관리 매뉴얼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국군의 사기진작 방안으로 국군의 날 행사보다 동명부대 등 파병부대에 대한 특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 필요해 보임. ○ 전략사령부는 옥상옥 구조를 만듦으로써 지휘체계의 혼선을 가져온다는 한계가 있음. ○ 전략사령부 등의 신설로 인하여 야전 부대의 인력이 부족하여 운영상의 문제점 등이 발생하였음. ○ 전략사령부 신설은 국군의 지휘체계의 복잡성 측면에서 부적절하며, 전략사령부령 제4조와 국군조직법과 충돌되는 부분들이 있음. ○ 중·러 등 한반도 주변 4강의 공군력에 대해 KADIZ는 국가안보를 지키는 최소한의 보호 수단이자 국민의 생존과도 직결된 문제기 때문에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중·러의 연례적 KADIZ 진입이 향후 한반도 및 동북아시

분 야	감 사 실 시 내 용
	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대한 합참의 장기적 대응 전략 및 예방적 조치가 필요함. ○ 중국과는 2021년 개정된 「한·중 해·공군 직통전화 양해각서」에 따른 직통전화 개통을 통해, 러시아와는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위험한 군사행동방지협정」에 의한 외교채널을 통해 위기를 관리할 수 있다고 보임. ○ 드론작전사령부는 탐지·추적 자산과 안티드론 자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 기준으로 소요 제기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임. 사령부 창설 이후에야 작전 교범과 소요가 제기되는 등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편 조치를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보고하기 바람.
한미동맹 및 전작권 전환	○ 미국이 북한에 대한 공격을 할 경우, 반드시 우리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전작권의 전환과 관련하여 컨디션 베이스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데, 전환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 질의함. ○ 전작권 전환 추진이 진척이 없는 문제에 대해 질의함. ○ 전작권 전환 관련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할 필요가 있음. ○ 전작권 이양문제와 관련하여 연합체제를 우리가 우선해서 갖도록 하여 명분과 국민적 자존심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 전시에 대한민국의 모든 인적·물적 자산을 총동원하여 국가 역량을 결집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합동참모의장이 전작권을 가져야 한다고 판단됨.

분 야	감 사 실 시 내 용
	○ 우리 군의 책임성과 전략적인 자율성 확보 공간이 필요하고 전시작전권 환수를 위한 준비를 제대로 할 필요가 있음. ○ 한 국가 혼자 안보를 지킬 수 없는 점과 미국도 동맹을 맺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전작권이 환수되더라도 한미동맹이 깨지는 것은 아님. ○ 북한에 대한 미국의 폭격이 우리 정부의 동의 없이 가능한지 대해 한미 지휘체계를 중심으로 보고하기 바람.
기타	○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GP불능화와 관련해서 합동참모의장이 책임감을 가지고 감사에 응하고 대변할 필요가 있음. ○ 독도를 분쟁 지역화하는 것은 일본의 목적임을 명심하고, 일본의 도발은 강력하게 대응해야 하나, 한미일 군사협력 차원에서의 일본과의 협력은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음. ○ GP 파괴 검증단의 문서와 영상을 비밀 해제하여 공개함으로써 국민들이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민통선 조정이 2007년 이후로 조정이 되지 않고 있는데, 민통선 조정에 대한 지자체(강원도)의 요구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 2023년 10월 경 북한 목선 귀순과 관련하여 귀순경로가 근해인 점을 고려하여 경계작전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외압 여부에 대한 보고가 필요함. ○ 인·태지역 수송로에 대한 기지화 또는 임차에 대한 연구

분 야	감 사 실 시 내 용
	가 필요함. ○ 해수부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정치권에 휘둘리지 않고 진실이 규명되게 할 필요가 있음. ○ 합동참모본부 청사 신축 사업의 공사 과정에서 국가 기밀 등 보안사항이 유출될 가능성에 대비한 대책과 방위력개선비로 건설된 현재의 합동참모본부 청사와 일반회계로 건설될 신축 청사의 세부 절차를 비교하여 자료를 제출하기 바람. ○ 헬기예비작전기지의 경사도 조정에 대해 합리적 근거가 없는 바, 민간공항에도 「공항시설법」과 그 하위법령에 예외조항을 마련해두고 있는 만큼 군이 합리적인 개정 방향을 모색해서 보고하기 바람. ○ 접경지역 주민들의 민간인 출입통제선 복상 요구를 합동참모본부가 적극 수용해 예하부대에 검토를 지시할 필요가 있고, 강원 접경지역 5개 지방자치단체가 건의한 사항에 대해 각 건의 건별로 조정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보고하기 바람. ○ 피아식별 방안으로 피아식별띠 대신 접착 테이프를 사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3. 병 무 청

분 야	감 사 실 시 내 용
병역자원 및 입영동원	○ 감사원이 지적한 대로 현역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아 병역의 무가 감면된 사람에 대하여 사실조사나 확인신체검사 시행 이 필요함. ○ 정신질환 관련 사회복지·현역복무 부적응자 다수 발생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신질환 검사 체계 강화가 필요함. ○ 장기대기 사유로 전시근로역으로 처분받는 인원에 대하여 대체 인력으로 활용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영주권자 중 자진 입대 인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 마련이 필요함. ○ 병역명문가 예우 시설, 혜택 사항 재확인 및 정비가 필요 함. ○ 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상실자 병역 면탈 의혹 행위에 대하여 대책 마련이 필요함. ○ 병역판정검사 오류 근절을 위하여 재확인 점검 등 대책 마 련이 필요함. ○ 정신질환 사유 병역 면탈 행위 방지를 위한 시설 및 인력 확보가 필요함. ○ 의대생의 현역병 지원, 공중보건의 편입률 저조 현상에 대 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정신질환 관련 검사를 강화하여 입대 후 부적응으로 인한 귀가자 최소화 및 군대 내 자살자 발생이 없도록 대책 수 립이 필요함. ○ 병력동원훈련 시 적소특기자 비율을 높혀 동원 태세에 만 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분 야	감 사 실 시 내 용
	○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 기간 내 미 귀국자 등 해외여행허가 위반자에 대한 실질적인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함. ○ 고의 마약 투약을 이용한 병역면탈 행위 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함. ○ 병역면탈 행위에 대하여 사법 당국의 처벌 수준이 낮은 것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병력자원 부족에 따른 병력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강구가 필요함. ○ 부정확한 신체등급 판정 처분이 없도록 관련자 엄중 처벌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함. ○ 폐지된 군 가산점 제도 재도입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현재의 군 복무기간 연장 방안 논의가 필요함. ○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민에 대한 병역 의무 부과 방안 검토가 필요함. ○ 병역판정검사 시 경계성지능인에 대한 정확한 판정을 위하여 인력 및 시스템을 보강할 필요가 있음. ○ 일정 기간 병역 의무를 이행한 외국인에 대하여 국적 부여 방안 검토가 필요함. ○ 지방자치단체 전사업무 담당자에 대한 전시임무교육 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입대가 확정된 인원에 대하여 체격 측정을 사전에 실시하여 입영 시 바로 군복을 지급할 필요가 있음. ○ 병역면탈 행위로 실형을 선고 받은 인원에 대하여 군 입대 방안 마련이 필요함.

분 야	감 사 실 시 내 용
	○ 여군예비군의 동원지정 대상자 일괄 제외 문제 검토가 필요함. ○ 병적별도 관리대상자 장기대기 사유 병역 면제 증가 현상 원인 분석이 필요함. ○ 사이버상 병역면탈 조장 정보 게시 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 및 수사 역량 강화가 필요함. ○ 저출산으로 인한 병역자원 감소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생화학분석기 교체에 따른 병역 처분 오류 발생에 대한 후속 대응 조치 마련이 필요함. ○ 불필요한 뇌간유발검사 장비 도입 문제 해결을 위한 후속 조치 마련이 필요함. ○ 입영판정검사 시 마약류 검사를 철저히 시행하여 군내 마약류 유입 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함. ○ 다문화가정 병사에 대한 입대 전 맞춤형 상담·사전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군 복무 적응을 돕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병역판정검사 정확도와 관련하여, 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 등급 세분화 등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 내용과 향후 군과의 소통 일정 등 계획안 제출이 필요함. ○ 병무청이 기획 및 검토하고 있는 병역면탈 처벌 강화를 위한 대책 등 구체적인 계획안 제출이 필요함. ○ 해외 영주권자의 자진 입영을 확대하기 위해 병무청이 고려하고 있는 추가 혜택 계획과, 병역의무를 완료한 영주권자에게 복수국적 부여 제안에 대한 병무청 입장 및 관련 자료 제출이 필요함. ○ 우울장애 관련 심신장애 정도 평가의 기준을 더 명확히 하

분 야	감 사 실 시 내 용
	기 위한 검토가 필요함. ○ 최근 발생한 대리입영 사건에 대해 병무청장과 장관은 국민께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함. ○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 외국인 자원 모병을 통해 부족한 병력 자원 감소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 ○ 동원미지정 예비군 훈련자에 대해서도 훈련보상비 지급이 필요함. ○ 탈북자들에 대해 일정 기간 우리 사회 적응기간을 부여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이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하여 외국인 입대관련 법·제도를 운용·도입하는 만큼 우리 군에 적용 가능한 제도를 검토·보고가 필요함. ○ 재판에서 실형 비율이 낮다는 것은 범죄자들에게 병역면탈 범죄에 유인책이 될 수도 있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병역면탈자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필요함. ○ 병역면탈 피제보자에 대한 악질 신고·허위 신고가 많아 수사력이 약화되는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더욱 강화하여 이러한 신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해야 함. ○ 군 입대가 특정시기에 몰리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불필요한 군입대 가산점을 줄여 입대 준비를 위한 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국군 상비 병력과 부사관 전력 숫자가 감소하는 추세이며, 이는 출산율 감소와 연결되어 기존 대책으로 해결이 어려운 상황임. 미국의 외국인 모병 프로그램 ‘MAVNI’와 같은 방안을 통해 병력 자원 문제를 대처할 필요가 있음.

분 야	감 사 실 시 내 용
	○ 승선근무예비역 배정업체인 해운사의 과실로 인한 배정 인원 감소 조치가 오히려 승선근무예비역들에게 불이익으로 전가 되고 있어, 제도적 보완과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 대구경북청의 병역판정검사 과실과 사건 은폐, 담당자 숨방망이 처분에 대한 지적과 이에 대한 관련자 엄중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함.
사회복무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등	○ 예술요원의 경우 선정 기준에 있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므로, 화관문화훈장 이상의 수훈자에 한해 예술요원을 편입하는 것으로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음. ○ 사회복무요원의 범죄 발생 건수 폭증 및 성범죄 비중 증가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함. ○ 장기대기 사유 사회복무요원 전시근로역 처분 증가 문제 및 이로 인한 예비전력 감소 문제 해결이 필요함. ○ 사회복무요원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을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사회복무요원 구의원 겸직 등 정치 활동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함. ○ 사회복무요원의 근무시간 외 이탈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국방부 등과 TF팀을 구성하여 사회복무요원, 병역특례 제도 등 보충역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 예술·체육요원 병역 면제 제도 재검토가 필요함. ○ 사회복무요원 군 비전투 요원으로 활용 가능성 검토가 필요함. ○ 사회복무요원 이탈행위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사회복무요원 마약·성범죄 근절을 위한 복무 관리 강화

분 야	감 사 실 시 내 용
	방안 마련이 필요함.
기 타	○ 서울지방병무청 이전 등 현안 문제에 대하여 군·민간 대화가 필요함. ○ 지방청 시간선택제 공무원 결원 존재시, 수시로 본인 의사를 파악하여 근무시간 확대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함.

4. 방위사업청

분 야	감 사 실 시 내 용
조직·인사 및 조정	○ 방산업체가 수행하는 국방기술개발 협약사업의 규모에 맞게 예산 확보 필요 ○ 현무-5와 같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는 놀라운 성과가 나오면 그에 걸맞는 적절한 포상도 함께 실시할 필요 ○ 방위사업청 청사 신축사업 감리계약 체결 지연으로 사업이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원인과 대책 필요 ○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방R&D 기능의 국방부로의 이관에 대한 질의와 문제점 지적 ○ 무기체계 연구개발을 제외한 모든 핵심역량, 국방과학연구소·국방기술진흥연구소 감독, 핵심·전용기술 개발, 신속연구·부품국산화개발 등의 국방부로의 이관에 관한 방위사업청의 입장에 질의 ○ 국방기술연구개발과 무기체계연구개발이 분리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와 우려 ○ 국방 R&D 추진체계 개편 TF에서 R&D 예산을 국방부가 가져가는 것으로 논의하고 있는데 방위사업청에서는 이를 좀 더 신중히 검토할 필요 ○ 국방 관련 R&D는 최상위 기관에서 조정·통제하여 체계적으로 종합될 수 있도록 할 필요 ○ 방산수출 기능을 수행하는 국방기술보호국과 방산육성 핵심인 연구개발 기능을 이관하면 방위사업청이 방산수출전문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 ○ 전세계적으로 무인기 전력 증강 흐름에 역행하여, 무인기

분 야	감 사 실 시 내 용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핵심 사업을 중단하는 것에 대한 해명 필요 ○ 방위사업청 조직이 유인체계와 무인체계 사업조직이 서로 분리되어 있는 상황에서 유무인복합체계를 구현하는 데 있어 사업조직 간 불필요한 행정소요가 발생하므로 개선 방안 필요 ○ 무인복합체계를 적시에 구현하고 신속한 무인전투체계 전환을 위해 이에 적합한 사업조직으로 조정·개편하는 방안 검토 필요 ○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관련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원장과 기조실장을 관련 직무에서 배제하고 방위사업청 자체 감사로 증명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청구를 검토해 그 결과를 보고하기 바람 ○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장이 한국화생방학회 회장이어서 직원들을 학회 등에 강제로 참석시키는 등 폐해가 있으므로 현재 진행중인 감사를 철저히 수행할 필요 ○ 방위산업정보시스템의 역할과 기능, 기대효과와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 ○ KF-21 부품별 및 완제품 국산화율에 관해 현재 달성된 국산화율과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이 추진 중인 과제 등을 구체적으로 보고하기 바람 ○ 방위사업청(장성 4명보직) 공무원:군인 비율 고려, 고위직 장성급 군인 정원 조정 필요
획득기획	○ 국방기술개발 협약사업에 대해 ① 착·중도금에 대한 이자 납입, ② 연구개발비 상시점검, ③ 주관기관외 참여기관 개별 협약 및 연구개발비 직접 지급을 요구하는 것에 대한 질의

분 야	감 사 실 시 내 용
	○ 방위력개선사업으로 소요가 결정된 무기체계의 사업추진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선행연구 조사·분석 수행기간 단축 필요 ○ 선행연구를 하기 위해 방산업체에 다양한 기술자료를 요구(RFI: request for information, 자료의뢰서)하고 있는데 그 법적 근거에 대한 질의 ○ 방산업체는 선행연구를 위한 자료 제출을 위해 많은 박사급 등 인력과 비용이 투입되는데, 이에 대한 비용은 국가 또는 연구기관이 지불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그 비용지불 방안 강구 필요 ○ 선행연구 요청항목 대부분이 비밀로 분류된 소요결정 문서이기 때문에 요청자와 작성자 간 보안 위배 가능성이 항상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 필요 ○ 방산업체 제출자료에 대한 환류체계가 없기 때문에 방산업체는 적극적인 투자의지를 상실할 수 밖에 없음. 선행연구의 기술적 타당성 등을 방산업체와 공유하면 방산업체의 R&D 투자방향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음. 선행연구 시 기업과 연구결과를 공유하는 환류체계를 검토할 필요 ○ K13기관단총 사용자불만 후속조치 검증사격 관련 사격절차에 대한 내용과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검토하여 객관적인 재검증이 될 수 있도록 조치 필요 ○ 사업타당성 추진상황, 예산 및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건의사항을 보고할 필요 ○ 현재 국방우주개발 사업은 방위사업법상 방위력개선사업과 우주개발진흥법상 우주개발에 해당하여 혼선 및 과도한 행정 소요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

분 야	감 사 실 시 내 용
	○ 국가안보상 필요가 있을 경우 우주발사체 발사 허가 권한을 우주항공청장에서 국방부장관으로 조정 필요성에 대한 검토 필요 ○ 다부처 사업일 경우는 국가우주개발사업 절차 적용을 위해 「방위사업법」을 개정해야 하고 군 단독사업일 경우에도 국가우주위원회 심의를 간소화하기 위해 「우주개발진흥법」 개정 필요 ○ 현재 작전운용성능(ROC)에 AI를 적용한 무기체계가 있는지에 대한 질의 ○ AI를 작전운용성능(ROC)에 반영한 무기가 완성되면 시험평가를 실시해야 하는데 시험평가 기준 필요 ○ AI 관련하여 2020년 12월에 국가 차원의 윤리기준을 정립했는데, 국방부는 국가윤리기준에 추가하여 별도의 국방부 윤리기준을 정립할 필요 ○ AI를 적용한 무기체계는 필요하므로 2028년도에 유무인 복합체계로 나가기 위해서는 AI를 적용한 작전운용성능(ROC), 시험평가기준, 윤리기준 등을 빨리 정립할 필요 ○ 무기구입으로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기 때문에 무기구입시 국부유출의 반대급부로 기술이전, 부품수출 등 절충교역을 고려하여 추진할 필요 ○ 2011년~2015년 사이 절충교역 획득 가치는 약 80억달러였는데 2016년~2020년에는 약 8억 달러로 대폭 감소하였는데 이는 ‘외국 정부와 계약을 체결하여 군수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절충교역을 추진할 수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한 「방위사업법 시행령」의 내용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를 시정할 필요 ○ 절충교역 핵심인 기술이전 이행률은 62%인데, 지연사유

분 야	감 사 실 시 내 용
	에 대한 질의 및 지적 ○ 병력위주로 운용되고 있는 GOP경계체제를 과학화장비를 활용한 감시체제로 전환함으로써 경계작전의 질을 향상시키고 장병근무 여건을 개선하고자 GOP 과학화경계시스템을 추진할 필요 ○ GOP 과학화경계시스템은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에 따라 AI과학기술을 접목한 성능개량을 진행중인데, 치밀한 사업관리를 통해 전력화에 차질이 없도록 할 필요 ○ 과학화경계시스템 사업은 시범사업, 1차 사업까지 실시했던 방위사업청이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장기적으로 병력감소에 대비하여야 할 필요 ○ 레바논에 수출된 무기는 헤즈볼라로 유출 또는 탈취 우려가 있으므로 수출에 신중할 필요 ○ 북한에서 우리측의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범했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사실관계 질의 ○ 리오셀계 탄소섬유 국산화 사업 관련 「방위사업법」 위반 사건에 대한 진행상황, 조치내용 및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할 필요 ○ 매년 수백개의 품목에 한도액 계약을 체결하면서 방위사업청과 부품제작사 또는 공급사 모두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법령 및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서 개선방안을 마련 필요 ○ 무기체계 정비를 해외에 의존할 경우, 전시나 비상 상황에서 신속한 장비복구가 어려워질 위험이 있음. 군의 대비태세와 무기운용에 미치는 리스크에 대한 질의와 철저한 관리 필요

분 야	감 사 실 시 내 용
	○ 북한 무인기 대남 침투사례(2022년)을 통해 당시 우리 군의 무인기 대응체계가 총체적으로 난국에 빠져 있다고 평가되었는데, 이후 우리 군 무기체계의 변화에 대한 질의 ○ 우리 군도 무인체계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활용 분야를 다각화하기 위해서 현시점에서 활용가능한 무인체계에 대해 신속한 전력화가 추진되는 것이 중요 ○ 함정에 탑재하는 근접방어무기체계(CIWS)-II의 지상형 개발계획 여부에 대한 질의 ○ 무기통계 공개 필요성에 대한 질의 ○ 한국은 무기거래금지조약(ATT) 가입국이며, 동 조약에 따르면 전쟁범죄 연루 위험이 있는 국가에 무기를 수출하지 않을 의무 존재 ○ 피아식별장치(IFF-Mode5)의 방산물자 지정 필요성에 관하여 검토하고 보고할 필요 ○ 미국이 피아식별장치의 핵심기술을 타국으로 기술 이전해 줄 가능성에 대한 질의 ○ 양산단계에 방산물자 지정이 안될 경우 일반물자로 분류되어 방산업체는 정비단계만 방산물자를 지정하기 위한 신청을 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후속 정비 해결방안에 대한 질의 ○ 심의 보류된 방산물자 지정을 적극 검토하고 방산물자로 지정되도록 조속히 추진할 필요 ○ 헬기 비행정보 저장장치 개선 관련하여 방위사업청은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사업으로의 추진 여부를 조속히 검토할 필요

분 야	감 사 실 시 내 용
	○ 제안서 평가가 ‘기술력 있는 방산업체 선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필요 ○ 획득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장리팀 도입을 조속히 추진하길 바라며, 제도 운영에 있어 비용을 최소화하고 관련 업무에 책임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출연기관을 적극 활용할 필요 ○ 무기체계를 기대 수명주기만큼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부품 공급망을 관리할 수 있는 방산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필요 ○ 현대전에서 대형 공격헬기에 대한 무용론이 나오고 있으므로 아파치 헬기 추가 도입을 재검토할 필요 ○ 방산업체간의 고소·고발 등으로 인하여 한국형차세대구축함사업(KDDX)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원만한 KDDX 사업 진행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이 역할을 할 필요 ○ 대기권 바깥에서 적의 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는 SM-3 도입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위사업청은 각별히 노력할 필요 ○ 무기체계 업체선정 시 사업수행 역량을 갖춘 기업을 정확하게 식별해 내는 것이 중요함. 기술력 평가의 변별력 향상 및 평가위원의 전문성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신속획득사업의 경우 단기간에 제품을 만들어서 군이 시범사용하여 중기소요로 전환되는 경우가 적으므로 신속연구개발사업과 같이 다양한 옵션을 생각하는 사업 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 ○ 미국의 대외군사판매(FMS)로 무기체계를 조달하는 방식은 가격 협상에서 융통성이 떨어지므로 가격 급등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분 야	감 사 실 시 내 용
	○ 구매시험평가에 투입되는 비용을 업체가 전부 부담하지 않고 방위사업청에서 보전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
방위사업	○ 폴란드측에서 제기한 FA-50 전투기의 장비불량으로 인한 비행 불가능 문제에 대한 질의 및 지적 ○ 폴란드측에서 최근 미국산 공대공미사일 장착 문제에 대한 질의 ○ 지난해 폴란드와 FA-50 48대 수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중 12대는 순차적으로 인계했는지 등에 대한 질의 ○ FA-50을 폴란드에 수출했지만 무장이 확보되지 않아서 현재 가동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개선할 필요 ○ 항공기 내장형 GPS 관성항법장치(EGI)는 폴란드 정부가 미국 FMS를 통해 직접 획득해 KAI에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 KF-21 인도네시아 분담금 감액에 관한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결정 내용에 대한 질의 ○ KF-21 인도네시아 분담금 감액에 따라 시제기를 포함하여 모든 가치이전은 분담금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여 분담비율 조정결과를 관련 문서 및 합의서에 반영할 필요 ○ KF-21 공동개발 관련하여 인도네시아가 당초 분담금 1조 6천억원 중 6천억원만 납부하겠다고 하였는데, 납부하지 않는 1조원에 대한 재원마련 방안 강구 필요 ○ 해안정찰용무인항공기 사업의 구매시험평가, 기종결정 평가의 적정성 등에 대한 질의 ○ 2024년 8월 24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방연구원 자폰드론 성능시험 현장지도를 하면서 2

분 야	감 사 실 시 내 용
	종류의 자폭드론을 공개했는데, 북한 자폭드론의 전력화 정도에 대한 질의 ○ 북한의 자폭드론으로 인해 우리 군의 한국형 3축체계의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므로 예의주시할 필요 ○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어렵게 개발된 소형 정찰 및 자폭무인기에 대해 긴급예산으로 대량생산체계를 갖추고 전방부대에 신속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 필요 ○ 국산 엔진은 국방규격 충족으로 2차 양산부터 K2전차에 적용하고 있지만, 국산 변속기는 국방규격 미충족으로 현재까지 미적용된 점에 대한 지적 ○ FX 2차 사업은 현재 안보상황, 경제성, 절충교역 추진 여건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절충교역 추진에 따른 국가적 실익이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통해 절충교역을 미추진한 점에 대한 질의 ○ F-35A 운영 관련 엔진 창정비 능력 확보 필요 ○ 군에서 운용 중인 드론 중 드론의 핵심부품인 FC(flight controller)의 우리나라 경쟁력 제고 필요 ○ 군수용은 WTO의 제약을 받지 않으므로 우리 군에서 사용되는 드론의 핵심부품인 FC(flight controller)는 국산으로 할 필요 ○ K13기관단총 멜빵고리, 소음기, 방열덮개 등 부속품 문제 외 총기와 소음기 결합 제한과 총기내 탄약 폭발사고는 심각한 문제이므로 신속한 후속조치 및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기 바람. ○ 2024년 3월 방추위에 KDDX 기본설계 결과 보고 시 사업추진 일정에 대한 질의

분 야	감 사 실 시 내 용
	○ KDDX 전력화 지연 시 기동함대 운영 차질 및 해상 킬체인(Kill Chain) 구축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KDDX 사업 착수방안 및 추진일정에 대한 질의 ○ 현재 전방분산탄이 대공포에 즉시 쓰일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지, 언제 운용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질의 ○ 해안지역 감시정찰 수직이착륙무인기 사업의 계약체결 지연 사유 및 대책에 대한 질의 ○ 드론 사업과 관련해 제기된 문제를 총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먼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고 제도개선을 마련할 필요 ○ 수출형 FA-50 국산레이다 체계 적합성 검증 과제와 유무인전투기 복합체계용 무인전투기 AESA 레이다 기술개발 과제간 중복성에 대한 의견 ○ 2024년 3월 KDDX를 방산물자로 지정한 이후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방산업체 지정 신청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생산능력판단 절차 진행없이 보안측정만 진행된 상황에 대한 질의 ○ 한화·KDI가 논산 양촌산업단지에 전체 25만m2 규모의 천무공장을 설립하려 했으나 주민반대 및 시일 단축을 위해 KDS라는 별도회사를 설립, 일부 부지에 대해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법률 무력화 및 주민 반대를 희석시키려는 편법적 방법을 사용한 것에 대한 질의 ○ 신형 화생방보호의 사업의 좌초 원인에 대한 질의 및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필요 ○ GOP과학화경계시스템 성능개량 사업을 통해 감시시스템은 카메라 성능 향상과 열상카메라가 도입되고 통제시스템은 AI분석 및 경보가 가능해졌는데, 기존 대비 탐지율

분 야	감 사 실 시 내 용
	향상에 대한 질의 ○ GOP과학화경계시스템 성능개량 관련, 성능개량 사업의 시험평가 단계에서 포복/위장 상태로 접근하거나 철책뿐만 아니라 철책 전방에서 이상 행위를 감지하는 사전감지 능력을 평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 인도네시아의 KF-21 개발 분담금 감액에 맞춰서 시제기, 기술자료 등 가치 이전 규모 축소 필요 ○ 성능이 강화되고 있는 방탄복에 대응하고 개인화기까지 K - 방산 수출 스펙트럼을 넓히기 위해 6.8mm 소총을 개발할 필요 ○ 국방R&D의 민간 비율이 매우 낮으므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필요 ○ R&D 평가 구조를 도전적 과제 중심으로 하여 실패하더라도 페널티를 주지 않는 등 R&D를 민간에 널리 확산시키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 레바논에 81mm 박격포탄을 수출하는 것은 우리나라를 위협에 빠뜨릴 수도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할 필요 ○ 군의 무선통신장비가 노후화되어 있으므로 첨단기술을 적용한 군 통신체제로 신속하게 업그레이드할 필요 ○ 운용부대 실사격에서 탄약이 약실 내부에서 폭발했던 K13기관단총의 결함을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 ○ 북한 무인기 사태에서 보듯이 남북간 상호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대화 채널을 개설할 필요 ○ 수직이착륙 드론의 도입이 늦어지고 있으므로 신속하게 도입을 하여야 할 필요 ○ MODE-5가 적용되는 피아식별장비에 대한 방산물자 지

분 야	감 사 실 시 내 용
	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필요 ○ 피복 관련 원단 바뀌치기 의혹을 받고 있는 업체 13곳에 대한 입찰참가 제한 조치를 하였는데 이에 따라 중증장애인 고용업체 등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입고 있음. 이에 감사원 감사를 실시할 필요 ○ 신채호함에 윤봉길함의 중고 안테나를 장착하여 형상통제 심의위원회 사후 승인을 받은 것은 관련 기관의 신속한 의사 결정, 문제 해결 방법이 탁월했던 긍정적인 사건으로 볼 필요 ○ 신채호함에 윤봉길함의 중고 안테나를 장착하여 형상통제 심의위원회 사후 승인을 받은 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필요 ○ 상업구매 방식은 FMS 방식에 비하여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협상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으므로 상업구매 방식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 ○ KF-21 Block-II도 빠르게 진행을 시켜서 방산 수출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할 필요 ○ 록히드마틴과 무기체계를 합작하는 것에 대하여 록히드마틴이 발빠르게 대응하는 것 같지 않으므로, 방위사업청이 좀 더 노력하여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할 필요 ○ KF-21 인도네시아 분담금 중 미납액에 대해서는 좀 더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 해병대상륙돌격장갑차 시험평가 도중 침수되어 연구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함.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향후 사업을 빠르게 재개해 해병대 전력 증강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필요

분 야	감 사 실 시 내 용
	○ 2024년 1월 제정된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과학기술전문사관 제도는 실효성 문제 등에 관하여 재검토할 필요 ○ KAI가 정권 교체에 따라서 핵심 간부들이 교체됨에 따라 사업 추진의 연속성이나 추진력 등이 떨어지므로 KAI의 민영화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 ○ 잠수함구조함 사업이 지연되었는데 관도급 분류시 장비의 특성 및 체계통합의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하는 등 주의할 필요 ○ 해안정찰용 무인항공기를 네온테크가 개발했는데 관세청에서 현재 조사를 하고 있음. 이는 방위사업청이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 ○ 별도의 드론 획득체계를 구축하여 운용할 필요 ○ 군단급UAV 소요를 합참에서 빨리 제기하면 방위사업청은 2년 안에 전력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 노후화된 무전기로 인해 훈련 중 휴대폰을 사용하는 등 군 통신체계의 허점이 드러나고 있어, 이에 대한 신속한 장비 최신화와 통신체계 전반의 개선이 필요
방산지원	○ 폴란드 방산수출의 특성상 정부 간 신뢰 구축이 수출 규모와 직결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 ○ 피복 납품 중증장애인 시설 업체 대상 보상방안에 대한 질의 ○ 방사청이 중증장애인 납품시설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취하 여부에 대한 질의 ○ 아리셀은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품질원을 기망하여 상습

분 야	감 사 실 시 내 용
	적으로 납품을 지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질의 ○ 아리셀 기 납품 물량에 대한 신뢰성 검증 1차 시험 결과 2개 로트 16개 중 9개가 규격이 불일치하는데, 납품 중지 등 대책에 대한 질의 ○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제도 운영이 부실하여 문제가 발생하면 생산 후 납품까지 해당 품목 보관 등 개선방안 마련 필요 ○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 제도를 통해 업체가 받는 혜택이 경쟁입찰시 물품 적격심사에서 평점 1점 추가에 불과해 실질적인 제도 시행 효과를 얻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에 대한 개선 방안 필요 ○ KF-21의 주요 핵심기술들을 우리가 직접 개발하였고, 향후 엔진도 우리가 개발할 필요 ○ 우리나라도 우주·항공분야의 핵심기술인 항공엔진 기술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할 필요 ○ 딜 디펜스가 제작한 IRIS-T가 KF-21과 FA-50에도 장착되는 만큼 관련 기밀 유출 여부 등 철저한 조사가 필요 ○ 방산 수출 시 현지 생산방식 전환, 시험평가 등 비용부담, GVC(Global Value Chain) 진입 어려움, 절충교역의 정보 획득 및 의견 개진 제한 등 문제 해결 노력 필요 ○ K-방산 성장 지속을 위해 중소기업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 ○ 방산업체가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 수출 계약을 거절하거나 지체상금 납부 상황에 놓여있는 경우가 있는데, 국방부와 협의하여 관련 내용을 보고하기 바람 ○ 2024년 방위산업전과 관련해서 IDK와 육군협회 간의 갈

분 야	감 사 실 시 내 용
	등 및 법적 분쟁의 진행경과 및 대책 등에 질의 ○ 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전시회(KADEX)와 대한민국 방위산업전(DX KOREA)의 갈등 국면에서 정부는 DX KOREA를 배제하고 KADEX를 지원한 것에 대한 질의 ○ 폴란드 수출 FA-50PL은 미국으로부터 무장장비 - 레이더 승인을 받아 한국에서 조립 후 시험비행이 필요한데, 납품까지 1년밖에 남지 않은 현시점에서 방사청은 이에 대한 상황을 파악하고 납기를 맞출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 수출입은행의 수출금융한도가 소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폴란드 K2전차 2차 이행계약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이 마련됐는지에 대한 질의 ○ 미국 정부사업에 참여하려는 자국업체 및 국외업체는 일정수준의 사이버보안 요건을 충족한다는 미국 CMMC(Cyber Security Maturity Model Certification)에 대한 질의 ○ 미국의 CMMC 제도로 인해 K-방산 수출에 미칠 영향 등을 파악하고 대책 마련이 필요 ○ 한국형 CMMC(Cyber Security Maturity Model Certification) 제도 마련 필요 ○ K-방산의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민간산업 전반까지 확대되었을 때 방사청의 CMMC(Cyber Security Maturity Model Certification) 제도가 이정표가 될 수 있게 제도 구축에 서둘러 주시길 바람 ○ 지난 5년간 절충교역 미이행(의무 불이행)으로 현금 몰수 후 해소된 금액(소멸된 가치)에 대한 질의와 대책 필요

분 야	감 사 실 시 내 용
	○ 절충교역을 통한 글로벌 공급망 진입 지원 필요성 강조 ○ 우수한 방산중소기업이 절충교역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필요 ○ 통합 절충교역 협상방안을 마련하여 중소기업들의 기술과 제품이 다양한 절충교역 상품으로 처리될 필요 ○ FMS 사업의 절충교역 적극 추진을 위한 방위사업청의 입장과 향후 개선 방안 필요 ○ 현행 방위사업법 시행령에는 FMS 사업에 대한 절충교역 생략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는 전세계적 추세와도 맞지 않음. 우리나라의 방산기술 발전과 수출 경쟁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전향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질의와 대책 필요 ○ 외국에서 무기 수입시 우리나라 절충교역 비율 질의 및 FMS 사업에 대하여 절충교역 생략 가능토록 규정된 현행 법령의 개정 필요 ○ 강구영 사장 취임 이후 공군이 KAI의 핵심 보직을 맡아 버리고 외부에 주요 무기체계 수출 단가를 공개하는 등 KAI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으므로 KAI에 대한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할 필요 ○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중점적으로 지원하여 방산 수출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할 필요 ○ 방산 수출 허가 심사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기술 난이도도 복잡해졌으므로 방위사업청의 전문성을 보강할 필요 ○ 업체가 개발한 FA-50용 AESA 레이더를 KAI에 공급하는 것을 방위사업청이 제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오히려 개발 장려를 해야 할 방위사업청이 업체의 개발을

분 야	감 사 실 시 내 용
	중복성 등의 문제로 제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므로 지양할 필요
국방기술 보호	○ 방산 관련 해킹이 날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중소기업들은 방산기술보호에 취약하므로 방산기술보호를 위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평가 모델을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 ○ 방산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해킹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예산을 대폭 증가시킬 필요 ○ 안티템퍼링(anti-tampering) 기술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수출된 국내 무기체계를 외국이 역설계하여 도용하는 일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할 필요 ○ 안티템퍼링 기술을 적극 개발·도입하여 우리 무기체계의 지속성·안전성을 더욱 높여주길 바람 ○ 2024년 9월 북한 해커 조직 김수키의 방산업체 공격 우려에 대한 독일 정부의 주의 권고가 있었는지 질의와 독일 유력 매체 슈피겔은 KF-21 미사일 공급업체 딜 디펜스에 대한 김수키의 공격을 보도했는데 우리나라 피해상황에 대한 질의

5. 육군본부

분 야	감 사 실 시 내 용
군 인사 군 조직 군 감사	○ 소수 병과의 통합된 평정 및 지휘 추천 그룹을 분리하여, 장교들이 군단급 참모 보직을 수행할 때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육군은 ROTC 선발에서 필기시험을 폐지하고 이를 모범 업무효율성 제고 사례로 선정한 바, ROTC 선발 평가 기준과 내용 보완이 필요함. ○ 마일즈 사업에서 뇌물을 제공하여 부정한 수익을 취한 업체에 대해 그 이익을 회수할 필요가 있음. ○ 미래의 안보 환경에 맞추어 군 구조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음. ○ 초급간부 지원율이 저하하는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심층 전수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 ○ 산재한 육군 지역방위사단 예하 부대를 통·폐합할 필요성이 있음. ○ 육아휴직에 대한 부수병력 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야전 실무자들의 업무 부담이 더욱 가중되는 구조임. ○ 순환보직이 모든 병과와 계급에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민간 군사기업(PMC) 제도화 과정에서 그 필요성에 대한 육군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 함. ○ 3사관학교 졸업생을 장기복무대상자로 지정하는 등 초급간부 유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경계작전을 민간 군사기업(PMC) 등 민간으로 이양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추진하기 바람.

분 야	감 사 실 시 내 용
	○ 아미타이거 4.0 통합기획단 출시는 2019년 1월 1일인데 육군 정책자료에는 2022년도에 출범한 것으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기 바람. ○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 당시 회식한 1사단장에 대한 보직 해임은 과도한 조치임. ○ 즉·강·끝 원칙보다는 전쟁을 막기 위해 군을 차분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북한이 러시아에 군대를 보낸다고 해서 우리 군이 참전하거나 무기를 보내는 것은 국가와 국민을 심각한 위협에 처하게 할 수 있으며, 우리 군은 오로지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냉정하고 단호하면서도 침착하게 대응해 나가길 바람. ○ 상담 실적은 20%, 예산은 40%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군 내 자살 비율이 감소하지 않으므로 전담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수도방위사령관, 방첩사령관, 대통령경호처장의 2024년 3월 만남은 국방부장관뿐만 아니라 육군참모총장에게도 보고되지 않은 만남임. ○ 대리 입영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함. ○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육군이 우리 장병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비를 빠른 시일 내에 구축해야 함. ○ 해병대 순직 사고에서, 합동참모본부 단편명령에 따라 해병대 1사단장이 아닌 육군 50사단장이 수해복구와 수색작전을 하라고 했었어야 함. ○ 지휘관의 보직이 끝나면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해야 함. ○ 육군의 성폭력 사건은 2019년 기준 2.5배, 음주운전은

분 야	감 사 실 시 내 용
	2021년 기준 1.4배 증가했으며, 성폭력 상담의 대부분은 상급자의 위계에 의한 성폭력임. ○ 안정적인 병역자원 확보를 위해서 군 복무가 자랑스럽고 전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함. ○ 학군 후보생에 대한 지원을 사관생도에 대한 지원에 비해 부족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 박격포 포탄을 활용한 드론 부대 구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육군사관학교와 육군3사관학교를 통합하여 단일 사관학교로 만들기 바람. ○ 학군사관과 학사장교를 통합하여 하나의 제도로 운영하기 바람. ○ 가산복무지원금 환수 불가능 사례 확인 및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보병 위주의 인재 양성이 아닌 미래전에 부합하는 포병, 항공, 공병 등의 인재 양성이 필요함. ○ 전투병과 중 항공이나 공병과 같은 병과 출신이 사단장이 될 필요가 있음. ○ 육군 간부모집 앱의 이용률이 저조하고, 모바일로는 지원서 작성이 불가능한 바,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 보임. ○ 육군 32사단 신병교육대 수류탄 폭파사고 관련, 사후 지원 및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기 바람. ○ 헬기 조종사 유출방지를 위한 대책과 '의무복무제도 기간 연장', '연장복무 시 장려수당 확대'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바람. ○ 32사단 신교대 수류탄 사고와 관련해, 정신건강의학적인

분 야	감 사 실 시 내 용
	상태에 따라 입대 장정을 더 꼼꼼히 선별하고 입대 후 심리상태 평가와 관리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인력획득이 어려운 현실과 3사관학교 출신 상당인원이 장기복무에 선발되는 점을 감안하면 육군에서도 3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의 장기복무 전환에 적극 찬성할 것으로 판단됨. ○ 일과 가정이 양립 가능하도록 군 순환보직제도의 개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교육 및 군사 훈련	○ 정신전력교재에는 북한의 행태가 2022년까지만 기록되어 있는데, 이를 최신화하여 교육하기 바람.
전력증강 및 운용	○ 육군은 기계화 장비 조종수 확보를 위해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육군은 현행작전 대비태세를 최우선으로 두고, 전방지역 핵심 표적 감시 및 정찰 능력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전차 성능개량 시 소형·저속·고각 접근 물체에 대한 능동방어 체계 구축이 필요함. ○ 전차의 생존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응파괴장치 장착이 필요함. ○ 경계작전의 개념 변경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헬리콥터 도입 예산 대신 드론에 대한 첨단장비에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지역예비군 부대도 현역 수준의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전력 보강이 필요함. ○ 해안경계 임무전환이 최초 검토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약

분 야	감 사 실 시 내 용
	20여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진전이 없이 현행 그대로 유지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임. ○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논의될 민간군사기업 제도화 과정에서도 육군의 입장과 필요성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기 바람.
군 수 군 시설 군 의무 군 복지	○ 편제 장비의 낮은 보유율과 노후화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 확보와 건조계획을 마련하기 바람. ○ 파주에 위치한 제1보병사단은 인천에 위치한 수협중앙회 인천가공물류센터에서 급식품목을 납품받고 있으나, 「군 급식품목 계획생산 및 조달에 관한 협정서」 제4조 제4항에 따라 경기도 관내에 위치하고 파주가 고유 업무구역으로 되어있는 경인북부수협에서 납품하는 것이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임. ○ 포천에 위치한 수송대대가 남양주 별내면으로 이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방부의 대응이 부족함. ○ 수도방위사령부 문서고의 라돈 수치가 높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함. ○ 60사단의 부대이전과는 별개로 탄약고 문제에 대한 추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육군 관사 및 간부숙소의 전면적인 실태조사 실시여부 및 향후 계획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설명하기 바람. ○ 포병대대 자체적인 K9포신 교체 훈련 및 관리 훈련 정기화에 예비 포신 여유분 확보 등 철저한 전시준비태세가 필요함. ○ 북한 핵·미사일, 화학무기 위협에 우리 장병들의 안전을

분 야	감 사 실 시 내 용
	보장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화생방 장비물자를 보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수명 연한을 초과한 중형 차량은 조기에 도태시키고 신형 중형표준차량 적기 도입을 위한 연도별 획득 계획과 필요 예산을 추산하기 바람. ○ GOP 과학화경계시스템 성능개량 시 오작동 등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함. ○ 중국산 부품이 포함된 CCTV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CCTV의 보안 점검을 매년 철저히 진행하기 바람. ○ 국방·군사시설기준에 따라 계룡대 주전력과 예비전력 공급 주체 분리를 조속히 추진하기 바람. ○ 2023년 8월 코브라 헬리콥터의 회전날개가 분리된 사건의 조속한 사고원인 파악과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 육군 헬리콥터에 상용 블랙박스가 아닌 항공기용 비행기록 장치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 탄약창을 조속히 지하화하여야 함. ○ 군인들의 사기와 복지, 식사 관련 문제에 대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함. ○ 화생방 보호의의 불량률이 56%에 달하므로, 빠른 시간 내에 하자 물자를 조치하기 바람. ○ 과학화 경계작전 고성능 카메라 217대 중 75대에 문제가 발생한 바, 무상 보수 기간 연장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특전사 훈련시설 통폐합을 통해 폐쇄되는 시설의 유희지매각을 검토하기 바람.

분 야	감 사 실 시 내 용
	○ 한강 작가의 책이 수년간 반입되지 못했으므로, MZ세대 군 사병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특전사가 도입한 대테러 기관단총은 실전 사용에 여러 문제점이 존재함. 향후 무기 도입 과정에서 현장 대원들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선진국은 대부분 유로 6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육군은 유로 1 내지는 3 기준에 따른 기준량을 적용해 군용차량의 배기가스 검사의 불합격률이 낮음. ○ 군 자녀들에 대한 교육 지원책을 마련하기 바람. ○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해 우리 군에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사업을 추진 중이므로, 육군은 차질 없이 이를 추진하기 바람. ○ 육군은 군 병력 감축에 따라 2030년대 중반부터 GOP 근무 장병 감축 계획을 가지고 있는 바, 경계태세 유지를 위해 GOP 과학화 경계시스템 오작동에 대한 시험평가 기준을 엄격하게 해야 함. ○ 동원사단의 신규 첨단전력을 보관할 창고가 부족함. ○ 경찰청이 계약을 취소한 테이저건 제품을 군에서 수의계약으로 체결했으므로, 해당 제품의 안정성을 재검토하고 계약 여부를 다시 평가할 필요가 있음. ○ 특전사에 미국산 칼을 복제한 중국산 모조품 칼을 보급한 사례가 발생했으므로,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함. ○ 평동훈련장의 존치를 위해 박격포 훈련을 장성종합훈련장으로 이전하고 평동훈련장은 폐쇄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이에 대한 군의 검토 의견을 제출하기 바람. ○ 광주 평동 군 훈련장은 국가적 낭비 초래, 인근 주민 재산

분 야	감 사 실 시 내 용
	권 침해, 지역균형발전 저해 등의 이유로 폐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꾸준히 지적되는 수통 위생 문제 해결을 위해 부대보급품이 아닌 초도보급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하기 바람.
기 타	○ 군인들에 대한 밀리터리 타운을 조성해 미래형 군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 바람. ○ 제2논산훈련소에 대한 연구용역을 미리 진행하기 바람.

6. 해군본부

분 야	감 사 실 시 내 용
군 인사 군 조직 군 감사	○ 해군의 드론 대응 전력을 합동참모본부, 방위사업청과 협의해서 조속히 전력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 해군 간부의 해기사 자격 취득 절차 간소화를 위한 해군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함. ○ 해군의 직업만족도가 타군에 비해 특히 급락한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종합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해군 전력에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람. ○ 해군진해호텔을 비롯한 위탁 관리 중인 모든 해군호텔에 대한 자체 감사를 진행하기 바람. ○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한 해양위원회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해양영역인식(Maritime Domain Awareness, MDA)을 구현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통제할 필요성이 있음. ○ 해군 병사에게도 육상 근무 시 병 기본훈련을 실시하기 바람. ○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하다가 중도 포기하는 인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상비병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 해외 외주정비비 증가 등을 고려하여 함정 정비 분야에 MRO 적용이 시급해 보이며, 이에 대한 해군의 입장과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하기 바람. ○ 해군은 항공기 조종사의 추가적인 인적 정보 관리 등 핵심 인력의 해외 유출 방지 대책을 제출 하기 바람. ○ 해군 내 내부고발로 인한 군인 및 군무원 대상 인사보복사례 및 현황과 방지대책을 제출하기 바람. ○ 해양영역인식(MDA) 발전을 위한 추진력을 확보하고 이를

분 야	감 사 실 시 내 용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국가 주도로 위원회급 조직을 설치하여 체계적으로 통제할 필요성이 있음. ○ 현 해군 인력을 유지하고 인력 확충 및 지원율을 제고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예산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나 관계기관에 요청하고 그 필요성을 적극 피력하기 바람. ○ 군무원이 지원함에 투입되는 것에 있어 유사시 전투에서의 지원함 內 군무원 신분이 어떻게 바뀔 것이고, 군무원이 민간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보호 권리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국방부와 반드시 논의하고 조율해야 함.
교육 및 군사 훈련	○ 잠수함 승조원 상담 프로그램 현황 및 유출 방지대책을 제출하기 바람.
전력증강 및 운용	○ 향후 해양 패권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뒤처지지 않도록 해군력 증강에 힘써주기 바람. ○ 방사능 측정장비 문제에 대해, 방사능 이상 수치 측정 후 안전조치 자동화·부실 장비 도입 방지·재발방지계획이 필요하며 2025년 도입계획을 상세히 작성하여 제출하기 바람. ○ 북한의 해상도발이 잦아지는 상황에서, 북한의 해상전력이 우세한 상황임. 해군의 수적열세를 보완하기 위해 주요전력을 첨단전력화하고 있으나, 해양무인전력 획득 및 확보 등에 더 속도를 내야 할 것으로 보임. ○ 최근 중국 해군의 한반도 근해 함정 활동이 점차 증가하는 만큼, 향후 해양 패권 경쟁에서도 우리나라가 뒤처지지 않도록 작전상 필요성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임. ○ 함정의 간부화 및 완전간부화 외 함정근무 불편성을 감안

분 야	감 사 실 시 내 용
	한 추가 수당이나 근무환경개선 등 해군이 검토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출하기 바람. ○ 대함미사일의 미발사 문제 및 명중률 저조 문제에 대해 실제 훈련시 확인되는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바람. ○ SM-3의 가격, 수량, 성능, 전력화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재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음. ○ SM-3의 비용을 과거 SM-6급 도입시 결정되었던 소요와 비교했을때 고비용의 결과라고 판단됨. ○ SM-3의 교전효과를 보면, 무수단급 미사일의 초고각 발사 시, 함정이 우리 연안 인근에 있을 때 무수단급 SLBM의 최소에너지 발사 시에는 SM-3도 제한될 수 있다고 판단됨. ○ SM-3 도입에 있어 우리 군에 실질적 전력증강이 될 수 있도록 지적인 문제들, 가격, 수량과 성능, 전력화 시기, SM-2의 실패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재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수입 함정과 항공기의 정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비 인력 확충 및 MRO 업체 활용이 필요함. ○ 군사력 세계 1위에서 7위 국가 중 항공모함이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함. ○ 해군의 전력 증강을 위한 예산 반영을 위해 해군에서 적극적으로 행동하기 바람. ○ 진해는 협소한 수로에 많은 함정이 있어 적의 주요 타격 목표가 될 수 있고, 운용에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부산에 해군작전사령부를 둔 취지를 살려 부산 해군기지의 활용성을 높이기 바람.

분 야	감 사 실 시 내 용
	○ 해군의 방사능 측정 장비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국민이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 해양 방사능 측정 장비가 도입 한 달만에 고장이 나고, 초기 계획과 다르게 해상이 아니라 육상에서 사용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했으므로 해군의 자체 감사를 실시하기 바람. ○ 해양 방사능 측정에 있어 한국원자력안전연구원 등 타 기관과 교차검증을 통해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 KDDX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방위사업청에 강하게 요구를 하는 등 만전을 기하기 바람. ○ 중국 해군이 우리 영해를 침범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기 바람. ○ 경계작전에 임하는 함정들이 NLL 부근에 집중됨으로써 남해나 동해와 같은 나머지 해상작전구역은 경계작전이 불완전할 것으로 보임. ○ 해군이 담당하고 있는 작전구역 대비 함정 수 부족으로 인해 감시 공백이 필연적으로 지속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은 해상 귀순 사건과 같은 문제가 재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 있음.
군 수 군 시설 군 의무 군 복지	○ 해군은 고가의 군수품, 총기·탄약류 등에 있어 지속적으로 분실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현행 군수품 관리체계의 미흡한 점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 입항 후에도 육상 휴식 공간이 없어 함정에 머물러야 하는 함정 근무자를 위해 육상 사무실 확보가 필요함. ○ 군무원 인력운용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군무원 주거지원 등 처우개선에 대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 바람.

분 야	감 사 실 시 내 용
	○ 해양정보함-Ⅲ 사업과 관련해, 업체가 시험 평가 방식을 변경하고자 하기 때문에 사업타당성 조사가 늦어지고 있음. 이로 인해 사업이 지연될 뿐만 아니라 평가 방식 변경의 근거도 부족해 보이므로, 해군은 국방과학연구소·KIDA와 함께 업체의 기술적 능력을 재평가하고 불가능할 경우 업체 주도가 아닌 국방과학연구소 주도로 사업 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7. 공군본부

분 야	감 사 실 시 내 용
군 인사 군 조직 군 감사	○ 고고도·중고도 정찰무인기의 중요성과 무인기 조종사의 열악한 처우를 감안하여, 항공수당의 대폭인상을 검토하고 조종사 충원을 위한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공군은 故 ○○○중사 사건 이후 유사한 사건이 또 발생했음에도 안일한 대응을 보이고 있음. ○ 故 ○○○ 중사 사건 이후 간부 성희롱 피해 응답이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5.3배나 증가함. ○ 반복적인 성폭력에 노출된 故 ○○○ 중사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보호조치와 함께 가해자와 책임자에 대한 진상조사와 강력한 조치가 필요함. ○ 공군은 군 사고로 인한 피해배상 심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소리를 더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지급되지 않은 배상금이 있다면 조속히 집행함으로써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지원해야 함. ○ AI 기술을 군에 신속하게 적용하기 위해 민간 및 산·학·연 협력 강화가 중요함. ○ 공군 군사경찰 보직의 업무 강도 및 근무 환경 개선이 필요해 보임. ○ 조종사 유출 방지를 위한 근무여건 개선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기 바람. ○ 기상악화나 항공기 결함 등으로 30일 이상 국외 파견된 조종사에게 항공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의 규정개정 협의를 진행한 후 협의 결과를 보고하기 바람. ○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통해 한반도를 감시하기 전에 방어 시스템을 조기에 전력화할 수 있도록 방위사업청, 국방과

분 야	감 사 실 시 내 용
	학연구소 등과 적극 협력하기 바람. ○ 전투기 조종사 항공수당 인상을 통해 민간항공사 조종사와의 보수격차를 줄이고,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외부유출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 항공특수통제사(CCT) 요원 선발횟수를 늘려서 인원 충원 속도를 높이고, 합당한 수당 금액을 지급하여 이탈 인원이 감소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항공특수통제사(CCT) 요원들의 정원 미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당 인상을 고려하고, 정원 미달의 기타 원인을 파악하여 국방부와 협의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 ○ 국가가 양성한 전투기 조종사가 민간 항공사에 취업할 경우, 양성비용의 일정 부분을 민간항공사가 부담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람. ○ 공군 예비역 정책간담회는 초급간부가 행사 지원에 참여하지 않게 하고, 골프 친목 행사로 오해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예비역 조종사 활용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함. ○ 블랙이글스를 통한 국위선양에 노력하면서도, 블랙이글스 조종사 등 비행팀 전원의 안전 문제에도 최선을 다하기 바람. ○ 무인감시체계의 조속한 도입을 통해 공군 군사경찰의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음.
전력증강 및 운용	○ 항공엔진 개발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군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KF-21 전투기 Block-Ⅲ의 추진이 필요함. ○ 민간항공사에서 도입하고 있는 지속 가능 항공유로 전투기

분 야	감 사 실 시 내 용
	연료를 전환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용역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기 바람. ○ 한반도 주변 한국 공군의 공중우세 확보를 위한 6세대 전투기 전력화 연도별 계획을 수립하고 보고하기 바람. ○ 공중급유기 2차 사업을 포함하여 공중급유기 추가 소요에 대해 분석하여 자료를 제출하기 바람. ○ 2030년까지 확보될 위성 전력의 생존성 확보를 위해 고출력 레이저 위성추적 및 레이더 우주 감시전력의 신속한 전력화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음. ○ 우주항공청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한국천문연구원 등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우주영역에 대한 인식 능력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하기 바람. ○ KF-21 Block I, II와 F-35A 2차 사업의 적기 도입 및 F-15K 성능개량 사업이 매우 중요함. ○ 무인기 체계를 조속히 도입하기 바람. ○ F-5가 도태 완료되고 KF-21이 도입되는 2027-2028년 경의 안보 공백이 우려됨. ○ KF-21 엔진 관련, 제너럴 일렉트릭 사로부터 전투기 엔진 기술을 이전받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공중급유기를 추가 도입하기 위해 공군이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 ○ 공군의 각종 전력 증강 사업에 있어 예산의 한계가 있는바, 공군은 자체적인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기 바람. ○ 우주기상 경보체계의 조속한 구축이 필요함. ○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미납 문제로 KF-21의 도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쓰기 바람.

분 야	감 사 실 시 내 용
	○ 사용 빈도가 낮은 비상활주로 고도제한 유지 및 지역 주민과의 상생을 위해 국방부 차원에서 고도제한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공군이 협조할 필요가 있음. ○ 공군의 무인항공기 전력화와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수당인상을 신속히 추진하고, 국방부와 관계기관에 그 필요성을 적극 피력하기 바람.
군 수 군 시설 군 의무 군 복지	○ F-15K 성능개량 사업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정비참여력을 확보하는 등의 최선의 노력이 필요함. ○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해 공군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함. ○ 석면 건축물 해체·정비사업에 대한 공군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함. ○ 현재 사용중인 전투지휘소를 쾌적하고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하기 바람. ○ 슈퍼 콘크리트를 활용한 탄약고 건축 방안을 검토해 보기 바람.
기 타	○ 블랙이글스 부대 주둔으로 인한 주민 피해와 환경 영향에 대해 공군의 적극적인 입장과 대책이 필요하며, 발암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스모크 개발에 나설 필요가 있음.

8. 해병대사령부

분 야	감 사 실 시 내 용
군 인사 군 조직 군 감사	○ 군 가산복무지원금 환수가 불가능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하고, 향후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 서북도서에서 근무하는 군인의 특수지근무수당이 일반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에 비해 부족하므로 수당 인상을 추진하기 바람. ○ 해병대 1사단 장병 순직 사고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병대는 작전, 교육, 부대관리에 힘쓰기 바람. ○ 해병대 순직사고와 관련해, 작전통제권이 없는 해병대 1사단장이 작전 관련 지시를 내린 바 있음.
교육 및 군사 훈련	○ 舊 해병대사령부 본관을 해병대 역사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전력증강 및 운용	○ 육군에서 진행 중인 AI 기반 경계작전태세 구축 시범사업을 모니터링하여 서북도서 경계작전태세 구축에 반영하기 바람. ○ 최전선에서 북한과 마주하는 서북도서방위사령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임무를 수행해주기 바람. ○ 민간인의 재산권 활용을 위한 차원에서 교동도 지역의 민간인이북통제선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기 바람. ○ 9·19 군사합의 이후 북한에 넘겨진 한강 하구 해도와 관련하여, 적이 이를 인지했을 경우 침투 전술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역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해병대 상륙돌격장갑차(KAAV-2)의 적기 전력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분 야	감 사 실 시 내 용
	○ 무인기나 드론에 대해서는 소프트킬 방식을 사용해야 하는데, 다수의 적 무인기가 침범했을 때 대응하기에는 그 여력이 부족함. ○ 적의 드론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조속히 도입하고,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할 것임. ○ 상륙지역 해안기동력, 작전지역 비포장지대에서의 기동력이 취약함에 따라 기동력 향상 및 지원능력 구축을 위한 중형 표준차량 도입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 ○ 전·평시 구분없이 해병대 본연의 임무인 상륙작전의 원활한 작전수행을 위해서는 중형 표준차량 확보에 필요한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므로, 추가 예산확보를 위해 국회나 국방부에 그 필요성을 적극 피력하기 바람.
군 수 군 시설 군 의무 군 복지	○ 백령도 6여단에 MRI를 도입하는 등 서북도서 지역의 의료환경을 개선하기 바람. ○ 해병대 장병 복지를 위한 다목적 체육시설 확보가 필요함. ○ 장병들의 생명 보호와 안전을 도모하고 해병대 안전 문화 조성을 위한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병대 안전단의 추가 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 해주기 바람.
기 타	○ 김포반도에 민군복합타운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9. 육군 제2작전사령부

분 야	감 사 실 시 내 용
군사작전 및 전략기획	○ 제2작전사령부는, 제2작전사령부로 지휘체계가 이전되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직권을 남용한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에 대해 항명 및 직권남용 혐의로 징계를 요청해야 함. ○ 무열혁신 4.0 과제 중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확립과 ▲합동후방지역 작전수행체계 발전을 위한 제2작전사령부 추진 방향과 경과 및 향후 계획을 보고하기 바람. ○ 제2작전사령부의 국지방공레이더 및 천호 전력화에 필요한 예산과 적기 전력화 시기, 전력화를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바람. ○ 소형선박은 법적으로 위치발신장치를 의무화하지 않아 단속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해양수산부에서는 어민들의 생업과 레저 발전 저해를 우려하여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 이에 따른 해결 방안 마련이 요구됨. ○ 해상 밀입국에 사전 대비하고 실시간 대응하기 위해 군-해양경찰 간 정례회의 시행을 통해 협력체계를 공고히 할 필요가 있음. ○ 실질적인 군-해양경찰 간 협조를 이루기 위해 예하 부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실질적인 조치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제2작전사령부의 광역 감시정찰 능력과 기동성 확보가 필요함. ○ 기관별 대(對)드론 체계를 구축할 경우, 전파 간섭 혼선과 중복투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대(對)드론체계는 통합방위 차원에서 합동 후방작전 개념으로 관계 기관과 조속히 협의를 진행하고, 협의가 어려울

분 야	감 사 실 시 내 용
	경우 국방부를 통해 국무조정실에 상정하여 정부 차원의 효율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 공공기관의 대(對)드론 체계 구축이 비용 문제로 우선순위에 밀리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를 법으로 의무화시킬 필요가 있음. ○ AI기반 해안경계작전 체계 구축 시, 다양한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전투실험을 통해 정확한 분석이 필요함. ○ 제2작전사령부가 해안경계 강화를 위해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공조하고 있으며, 경계작전의 효율성을 위해 법개정을 필요로 하는 만큼 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정부가 수용 가능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전력기획	○ 최근 4년간 소형무인기에 대한 탐지, 식별, 타격 현황이 없는 것은 현재 운용중인 저고도 탐지레이더로는 무인기 탐지·식별이 어려운 점이 원인임. 제2작전사령부 내 중요시설을 고려할 때, 국지방공레이더와 같은 탐지 장비와 천호와 같은 식별 및 타격 방어무기의 전력화가 필요해 보임.
전력증강 및 운용	○ 제2작전사령부의 해안감시레이더-Ⅱ 전력화 추진 계획 및 소요예산, 현재까지 추진 경과와 향후 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바람. ○ 제2작전사령부 지역 내 민간 드론 탐지 사례가 1024건 이루어졌으나, 무력화한 사례가 없는 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군수 및 시설	○ 군부대 이전은 지역 경제와 주민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제2작전사령부의 이전은 평택 험프리스 사례와 유사하게 ‘민군상생 복합타운 모델’로 추진되어야

분 야	감 사 실 시 내 용
	할 것으로 보이며 그 방안에 대해 모색할 필요가 있음. ○ CCTV 통합관제센터와 통합방위지원본부 간 영상정보 공유가 되지 않은 6개소에 대해 구축 지원을 조치하기 바람. ○ 대대단위 예비군 훈련장 115개소를 여단 단위 과학화 훈련장 23개로 통합 구축하는 작업을 서둘러 마무리할 필요가 있음. ○ 타 지역예비군들이 통합훈련장으로 이동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불만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이 필요함. ○ 해안경계작전용 차량에서 지속해서 하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에서 상용차량을 기반으로 소요를 제기한 이유가 없다고 보임. ○ 조달청 낙찰률을 통해 미루어 보았을 때 사실상 최저가로 차량 수급 사업을 진행 중인데, 지속적으로 차량 하자 문제를 뱀질식 처방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현재 제2작전사령부 해안감시를 위해 운영 중인 육군경비정 16척 모두 내구연한 15년을 초과했으므로, 육군 경비정 노후화에 따른 개선 대책이 필요함. ○ 2027년부터 신규 육군 경비정 사업이 시작되므로, 유·무인 복합체계의 미완전성을 감안하여 조속히 사업 시행이 필요함.
군 조직 군 인사 교육·복지 등	○ 육군에서 추진하는 주거지원사업을 부대이전 계획에 반영하여 주거문제 해결, 인구 유입,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 육군의 민·관·군 상생 협력모델 사업이 상급부대에서 추진될 때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분 야	감 사 실 시 내 용
	○ 해안경계부대 근무자들의 처우와 관련하여 제2작전사령부 차원에서 행정 소요를 감소시키고, 감시 장비를 적시에 교체하는 등 해안경계부대의 피로를 경감시키고 전투력을 보존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기타	○ 성과위주의 예비군 훈련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가 필요함.

10. 국방과학연구소

분 야	감 사 실 시 내 용
운영·관리	○ 국방과학연구소가 설립될 1970년 당시에는 민간의 기술 수준이 낮아서 동 연구소가 무기체계 개발을 주도했지만, 지금은 민간에 기술 개발을 맡기고 사업관리를 하고 있음. 현재 국방과학연구소의 무기체계 자체 연구개발과 사업관리의 비중의 적정성에 대한 질의 ○ 국방과학연구소는 민간이 접근하기 어려운 ‘비닉 사업’과 우주선·국방반도체 등 수익을 내기 어려운 ‘비익 사업’의 연구개발에 치중할 필요 ○ 국방부 직할부대 「국방통합데이터센터」, 한국국방연구원 「국방데이터분석센터」와 국방과학연구소 「국방AI센터」 간 협업관계 현황 질의 및 협업 필요성 지적 ○ 국방과학연구소 「국방AI센터」의 적의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AI 데이터 보안정책과 체계를 구축할 필요 ○ 국방과학연구소가 책임지고 신형 화생방 보호의 사업 완수에 나서주길 바람 ○ 국방과학연구소는 무기체계 개발을 업체 주관으로 전환하는 재구조화를 추진했으나, 현재 국방과학연구소 주관 무기체계 개발사업은 19개, R&D 예산 비중은 27%에 달하고 있음. 전략·비닉 무기 개발에 집중하기 위한 국방과학연구소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하기 바람 ○ 북한의 오물풍선을 드론으로 중간에 수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 ○ 북한에 추락한 무인기를 국방과학연구소 정밀 분석할 필요

분 야	감 사 실 시 내 용
조직·인사·재무	○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장이 학회장을 겸직하는 학회에 많은 직원이 참석하고 1,600만원 가량의 예산을 집행한 것은 직위를 이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철저한 진상조사와 감사가 필요 ○ ‘신속획득제도 발전 기술협의’ 참석을 위한 미국출장 관련하여, 신속원의 신속획득관련 부서 직원이 아닌 현존 전력기술부 직원이 동행한 것에 대한 소명 필요 ○ 2022년부터 직원 상여금 지급 사례가 없는데, 우수업무 성과자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의 금전적 보상이 필요하므로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 ○ 국방과학연구소 직원들은 국가와 안보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숨은 주역들이므로 합당한 예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 ○ 국방연구개발의 성과가 한국 방위산업 전반에 미치게 되는 공로를 인정하여, 연구원들의 사명감과 국가적 예우를 증진시켜주는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람 ○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원에게도 보국훈장이 수여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 국방과학연구소는 장애인 고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11. 국방기술품질원 및 국방기술진흥연구소

1) 국방기술품질원

분 야	감 사 실 시 내 용
운영·관리	○ 국방기술품질원에서는 대전에 국방우주인증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진행상황에 대한 질의 ○ 국방기술품질원의 방산기술보호를 위한 인원, 조직 및 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질의 ○ 방산기술보호센터가 그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이 필요 ○ 군납용 리튬전지 공장 화재사고 관련하여, 에스코넥과 아리셀의 바뀌치기가 어떻게 가능한지의 대한 질의 ○ 국방기술품질원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법률적 근거가 상대적으로 미약하므로 국방기술품질원법 등 제정에 대한 관심과 지원 필요 ○ 아리셀 화재사건 관련하여 국방품질경영체제(DQMS)를 제대로 관리·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수조사도 실시할 필요
조직·인사·재무	○ 국방기술품질원의 보안 검색을 담당하는 근로자의 급여가 2024년 3월부터 월 38만원씩 삭감되는데, 용역 근로자들의 존엄한 삶을 위해 근로조건이 불합리하게 변경된 부분에 대한 관심과 대책 필요 ○ 법률상 고지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아 용역에 낙찰받은 회사뿐 아니라 근로자 개인의 중대한 권리를 침해하였음.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 국방기술품질원은 무기체계의 결함을 신속히 발견하고 보수할 수 있도록 야전부대 정기적 사후운영평가 방안을 검

분 야	감 사 실 시 내 용
	토할 필요 ○ 국방기술품질원장의 군복무시절 발행한 책 내용 관련하여 현시점에서의 대북 인식 차이에 대한 질의 ○ 국방기술품질원은 장애인 고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필요

2)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분 야	감 사 실 시 내 용
운영·관리	○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선행연구, 핵심기술 기획 및 관리, 부품국산화사업 등의 사업수행을 위해 1조원 이상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데, 엄정한 집행관리 필요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핵심기술연구개발 사업의 협약 예산 집행률은 어느 정도이고, 2024년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 질의 ○ 2024년 핵심기술 연구개발 사업 제안요청서 변경사항 및 제안요청서 내용의 적절성 검토 여부 확인 필요
조직·인사·재무	○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그 기능의 특성상 업무의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현재 직원의 계약직 비중이 크고 이직률도 높아 대책이 필요 ○ 계약직 직원들의 잦은 이직으로 과제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힘들고, 계약직은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방산업체의 로비에도 취약할 수 있으므로 인력운영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

Ⅲ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국 방 부 (100건)

- 단기 비상근예비군 제도의 훈련 기간을 20~30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비상근예비군 보상비를 현실화하고, 최소 응소기준 등을 포함한 지급기준을 강화할 것.
- 급여 인상에 맞춰 병 진급 기준을 높이고 더욱 엄격한 진급심사를 진행하며, 적절한 감봉·강등 징계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재외무관 파견 시 현지 문화에 대한 국방부 차원의 교육 지침을 마련할 것.
- 해외 무관 중 실적이 우수한 자원을 임기제가 아니라 정규 진급시킴으로써 보직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
- 2023년 군내 하극상이 373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만큼, 획기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것.
- 북한에 말라리아 공동방역을 적극 제안하고, 이를 군사대화 재개를 위한 계기로 삼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암호호 유출 등 군사기밀 유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독립군과 광복군을 계승한 우리 국군의 건군연도를 시정하여 정신전력교재에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헬리콥터 후송 원칙을 거리 기준에서 병원의 의료수준까지 고려하는 방향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해외무관의 30%에 달하는 인원이 TOEIC 700점대 이하인 상황에서 최저 어학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민군 융합형 군대를 조성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상병건강검진을 병역판정검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실시하여 복무 중 건강 변화를 확인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훈련병 대상 군기훈련 금지와 휴대전화 사용 허용 방침을 재검토할 것.
- 해상풍력발전사업 추진 시 중국산 기자재 사용으로 인해 군의 함정과 잠수함의 작전 범위가 노출될 수 있으므로 국방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수립할 것.
- 부사관 선발 필기시험을 폐지하지 말고 존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국군정보사령부의 인력, 부대구조, 조직문화 등을 해체 후 편성하는 수준으로 개편하고, 기밀 유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보안 시스템 강화와 견제 체계를 확립할 것.
- 국방정보본부장의 과도한 지휘권과 정보기관의 중복된 기능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것.
- 미순직 처리자 3만 8천명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성희롱 피해 상담률은 늘어난 데 비해 신고율은 오히려 줄어든바, 제대로 된 원인 파악과 후속 조치를 할 것.
- 초급간부 지원율, 사관학교 지원율, 부사관 지원율 모두 하락하고 있고 부사관 같은 경우는 임관율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관사 퇴거 관리 강화를 위하여 퇴거지연관리비를 시세 수준 이상으로 상향하도록 할 것.
- 전국 관사를 전수조사하여 규정을 어긴 퇴거불이행자에 대한 조치를 하고, 불합리하게 운영되었던 규정을 개선하여 군인 등 입주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형평에 맞게 관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 연속해서 2년 이상 체력검정 미 실시 인원 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조치할 것.
- 국방 R&D의 국방부 이관 추진은 방산비리로 인해 방위사업청을 신설한 취지와 그동안의 방위사업청 운영성과 등을 훼손하는 것이므로, 재검토할 것.
- 전쟁기념사업회장의 연봉 인상률이 10%에 달하여 기획재정부의 연봉 인상률 2.5%를 초과한 것은 부적절하고, 이에 대한 이 사회의 명시적인 승인여부도 불분명하므로, 향후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 일선 부대의 중간간부 충원율이 낮은 문제에 대하여 충원율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순직 1·2·3형을 통합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고려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향후 병역자원 감소와 간부의 직업만족도 하락 등을 고려하여, 우리 군의 구조적인 문제를 진단해 간부의 직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군인의 수당체계를 임무의 위험성·근무지·계급과 복무연수를 반영하여 다양화하고, 자동으로 연동화해서 군에서 요구하지 않아도 반영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

- 가족수당의 경우, 군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공무원과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경우 필요한 수당을 못 받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
- 군의 마음건강 서비스에 대한 군 기밀 유출 및 비리 의혹이 있으므로, 관련자와 관련 문서 전체를 포함한 보고서를 국방부 차원에서 제출할 것.
- 이명과 난청 피해자들이 정당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증명절차를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도와야 하며, 엄격한 보상 기준을 국가보훈부와 협력해 마련할 것.
- 전시작전권 전환에 있어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한미가 이해관계가 같다고 보이나, 북한 외 국가와의 전쟁 상황에서는 한미 간 이해관계가 일부 부합하지 않을 수 있기에 이 경우 전시작전권에 대한 규정을 정리하도록 추진할 것.
- 사이버국방학과 출신 인원을 사이버 업무 이외의 일반행정이나 기타 업무에 배치하는 것은 학교 설립 취지와도 맞지 않으며 능력 활용 차원에서도 비효율적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해당 인원들을 사이버 분야에 배치하도록 노력할 것.
-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업무가 상당히 과중한 상태이므로, 타 기관과 비교하여 인력 보충 방안을 마련할 것.
- 성비위 사건으로 분리조치된 인원 중 최초에 행위자로 지목되었으나 비위 행위가 없다고 무혐의로 인정된 군인들은 조사기간만큼의 필수보직을 이수하고 인사관리도 다시 원래대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
- 3사관 학교의 선택과목으로 전환된 과목 중 필요한 과목은 다시 전 생도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 국가보훈부가 담당하는 제대군인의 관리업무를 국방부가 맡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의 필요성을 검토할 것.

- 군에서 지원되는 이사화물비의 경우 지원비용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최초 임용(관) 및 5년 미만 전역자에 대한 단독이사비가 지원되지 않으므로 이를 개선할 것.
- ROTC를 제대하고 나오는 초급장교는 28개월을 복무하는데 일반 병이 18개월을 근무한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초급장교들의 수혈이 어려우므로, 복무 기간 차원에서의 제도적 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
- 장병들이 채무로 인해 임무에 전념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 병사 월급이 가파르게 상승한 만큼 국방부, 각 군 차원에서 비전투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병 대상 내실있는 경제교육 방안을 마련할 것.
- 한국국방연구원(KIDA) 장기근속 연구 인력에게 보국훈장을 수여하는 등 헌신과 노고에 보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
- 민간군사기업 제도화와 관련하여 사회적 공감대 형성, 법 제정, 제도 도입까지 국방부 주도 범정부 TF 구성방안을 협의할 것.
- 군의 '콜드체인 감시라벨' 확대 시범사업 적용을 적극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장병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원적외선 난방 기술의 확대 도입을 추진할 것.
- 시설공사 사업 과정에서 감독관과 특정업체의 유착 방지를 위해 근무자의 청렴 교육을 강화할 것.
- 군인의 정년도 사회적 추세에 맞춰 연장할 필요가 있으므로,

국방부에서 관련하여 직업군인으로서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특수병과의 경우 최저복무기간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국방부가 안을 제시할 것.
- 의무후송대대와 같이 가혹한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들이 있는지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이들에게도 초과근무시간 확대 적용을 추진할 것.
- 군 급식 공급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와 식량안보를 위해 향후 수의계약을 70% 이상으로 유지하는 방안의 필요성을 검토할 것.
-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운영과 별개로 이미 군에서 장기차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학사학위 이상 학위를 소지한 장병들을 위해 전문교육과정을 마련할 것.
- 여군의 예비역 편입 확대를 위한 추진방안을 마련할 것.
- 학생예비군에 대한 불이익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학교 차원의 홍보활동 및 학칙개정 뿐만 아니라, 국방부 차원에서 사례를 확인하기 위한 신고시스템을 구축할 것.
- 경찰대학 출신 간부가 의무복무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금을 환수하는 것처럼, 사관학교 장교들에 대한 환수 제도를 마련할 것.
- 사관학교 군무원 교수들의 이탈 방지 및 우수교수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국방대 교수에 준하는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군 마트에 입점하는 담배 종류에 대한 심의과정 및 기준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외국계 담배 및 쉐련형 전자담배를 입찰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국군 춘천병원 개편사업과 관련해,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가 작성된 하도급업체의 경우에는 국방부가 잘못하여 원청업체에 지급한 하도급업체 공사비 등은 국방부가 원청업체에 반환청구하고, 하도급업체의 공사비는 조속히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전쟁기념관 공무원 노동자의 처우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사이버사령부의 문민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군무원이 맡고 있는 부사령관 직위를 민간 직위로 전환하거나 감찰실장을 민간 직위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국군정보사령부의 문민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내부 감사 및 감찰을 담당하는 직위를 민간 직위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월남전 참전자 중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군인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특별보상 방안을 검토할 것.
- 기초체력 위주의 단순 체력검정을 넘어서 실제 전투임무수행에 대비할 수 있는 체력검정기준을 마련할 것.
- 진중문고 선정과정의 회의록 및 심의의결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CCTV 등 장비 도입 시 국산 여부를 평가하는 방안을 개선할 것.
- 유해발굴사업 등 야외 작업시 신증후군출혈열 예방접종 등 사고 예방과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
- 군대 자살예방 전담조직의 신설과 자살예방 전담 인력 보강 및 총체적 시스템 구축방안을 마련할 것.
- 사이버범죄, 마약, 딥페이크 등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신종 범

죄에 대응하기 위한 TF를 만들어 국방부 차원에서의 대비책을 마련할 것.

- 진급 적체를 해소하고 인력의 장기적 활용을 위해 '소수획득, 장기활용' 체제 구축 방안을 검토할 것.
- 국군병력의 감소 추세로 인한 현실적인 차선택으로서 여성들의 자원입대를 허용해 여군 비율을 높이는 여성지원병제 방안을 검토할 것.
- 장기복무 희망자에 한해 보수교육을 통해 타 병과로의 전환도 가능하게 제도를 설계해 이 인원들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공무원의 경우 인사혁신처에서 법정의무교육을 담당하기에, 각 군에 대한 것은 국방부에서 통합 관리하도록 할 것.
- 군 내부 교육체계를 재정비하고 법정의무교육을 총괄 담당하는 부서를 지정해 낮은 이수율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이번 북한의 불법 파병을 계기로 나토 전장정보수집활용체계 (NATO BICES)의 가입을 조속히 추진할 것.
- 사이버작전 역량강화비 신설, 최초 임관계급 상향, 진급 최저복무기간 특례조항 신설 등을 통해 기존 사이버작전 인원은 유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 해군과 공군, 해병대 출신 예비역의 경우 군 경력 증명서 발급을 받기 위해 직접 국방부와 각 군 민원센터를 방문해야 하며 국방부의 '국방 증명서 통합 발급체계'는 아직 정부24와 연계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므로,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
- 장병 및 초급간부 처우개선에 필요한 예산 증액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군인과 군무원의 대민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개인화기 사격과 체력단련에 대하여는 전역 시까지 관리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
- 군 내부에서 발생한 대형 보안사고를 고려할 때, 외부보다는 군 내부의 보안체계 개선을 시급히 추진할 것.
- 급식비 인상에도 만족도가 감소하고 있어 국방부는 앞으로 급식비 인상 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것.
- 반복적인 성폭력에 노출된 공군하사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보호조치와 함께 가해자와 책임자에 대한 진상조사와 강력한 조치를 실시할 것.
- 국방부가 국민 세금으로 대응태세 ‘즉강끝’을 새긴 골프공을 제작해 배포한 행위는 부적절한 만큼, 향후 불필요한 예산 집행이 이뤄지지 않도록 관리할 것.
- 군 간부의 육아휴직 등에 대한 대체인력 확보방안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국방혁신 4.0 관련 개념과 교리 등의 마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미래전에 대비하도록 할 것.
- 정신전력교재에는 북한의 행태가 2022년까지만 기록되어 있는데, 이를 최신화하여 교육할 것.
- 특전사 훈련시설 통폐합을 통해 폐쇄되는 시설의 유희지 매각을 검토하기 바람.
- 국방·군사시설기준에 따라 계룡대 주전력과 예비전력 공급 주체 분리를 조속히 추진할 것.
- 수도방위사령부 문서고의 높은 라돈 수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오물풍선에 생화학무기를 탑재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생물테러에 대비하여 국내산 탄저백신 도입을 검토할 것.
- 북한의 소음방송에 따른 강화도 일대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대책 및 보상을 검토할 것.
- 합동참모의장은 해안경계 임무전환에 대한 실효성을 검증하고 임무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미뤄왔던 경계임무 전환을 추진할 것.
- 북한의 탄도미사일 4.5t 신형 고위력 미사일 시험의 성공여부에 대해 확인할 것.
- 외국의 민간 위성을 통한 지도서비스에 우리 중요한 안보시설의 노출이 되는 것에 대해 방안을 마련할 것.
- 국방정보본부의 핵심 현용 사령부는 합참의장 직속으로 할 필요가 있으므로 국방부와 갈등 없이 우리 정보역량이 재구축될 수 있도록 협력할 것.
- 미군의 비통제형 합참의장제와 유사하게 현 합동참모본부가 군 통수권자의 군령권을 보좌하고, 새롭게 합동사령부를 설치해 지휘를 전담하게 하는 개편안을 적극 검토할 것.
- GP검증 문건('북한 파괴 GP 검증 보고서')의 비밀 해제 전 구체적 내용이 유출된 경위와 군사기밀법 위반여부를 조사할 것.
- '자유' 등 대대급 보급 정기간행물 전반의 정치적 중립성 준수 여부, 가짜뉴스 유포 여부 등을 검토하여 예산을 정할 것.
- 중견간부 이탈방지를 위한 전세대부와 공공임대사업 확대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협력을 강화할 것.

2. 합동참모본부 (28건)

- 북한 국방상으로 임명된 노광철과 총참모부 부장으로 임명된 이영길은 전략가로서 대한민국을 상대하는 전략, 작전계획 및 상황이 변할 것이므로 잘 주시할 것.
- 북측의 대남통지문 통보시 유엔사 통보와 관련하여 유엔사 통보와 합참의장의 보고 시점 간 차이가 발생하므로 신속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할 것.
- 북한의 의도된 심리전에 휘말리지 말고 적의 도발에는 반드시 3축 체계를 가용하고 한미동맹의 확장억제 체계를 통해 대북 억제 능력과 태세를 더욱 강화할 것.
- 미국 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전쟁 시나리오를 두 가지 제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비할 것.
- 북한의 오물·쓰레기 풍선에 대한 무력화 방안으로 드론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하여 항공안전법에 따라 승인절차가 준수되도록 할 것.
- 대북전단과 관련하여 민관군 통합방위체제에서 국토부, 지자체하고 협상테이블을 마련하여 대북전단 문제를 통제하고 협의할 것.
- 북한이 러시아제 수송기를 공중조기경보기로 개조 중이라는 것과 관련하여 북한의 운영능력 및 우리에의 위협 등을 파악할 것.
- '23년 10월 경 북한 목선 귀순과 관련하여 귀순경로가 근해인 점을 고려하여 경계작전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할 것.

- 해도에 포함된 정보를 통해 북한이 침투작전시 이를 활용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에 취약점을 대비하고 분석해 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
- 북한의 핵잠수함 추진과 관련하여 우리도 핵잠수함의 필요성에 대해 합참에서 주도적으로 검토할 것.
- 프리덤 에지 훈련에 대한 사후검토회의를 합참의장이 직접 주관할 것.
- GOP경계작전부대의 고정식 운영과 관련하여 경계작전의 효율성과 장병들의 복무여건이 잘 조화되도록 할 것.
- 경계작전 개념 변경시 유엔사령부(UNC)와 협조할 것이 많으므로 민간군사기업(PMC) 등을 통해서 잘 정리할 것.
- AI를 전군 모든 시스템과 지휘체계에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확보 문제, 할루시네이션 문제 등을 고려할 것.
- 대테러 기관단총 전력화 부대와 관련하여 육군 특전사 707특임단와 해군 UDT 제출자료가 상이한 문제가 있으므로 공문서 위조 등 조사가 필요하고 사용실태를 점검하며, 사업담당자의 전역 후 납품업체 취업, 특전사 실무자 진출 등에 대한 진상조사를 검토할 것.
- 군부대 민간 드론의 침입 사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합참의 육사비율 조정 및 주요 보직 제한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
- 전략사령부의 순환보직 문제에 대해 국군조직법 개정, 예산배정 등이 먼저 이루어지도록 할 것.
- 댓글요원의 진급에 대한 실상 파악, 책임자 엄벌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직할부대 방문 및 점검 등 부대관리 매뉴얼을 마련할 것.
- 인태지역 수송로에 대한 기지화 또는 임차에 대한 연구를 추진할 것.
- 합동참모의장을 미국과 같이 비통제형으로 군령을 보좌·자문하는 기구로 만들고, 합동군사령부가 전반적으로 전·평시를 지휘하며 독자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국내외 반입반출 물자에 대한 통관 절차를 구체적으로 지침서에 반영할 것.
- 항만단(통관과) 실무자들에 대한 교육 및 감독을 강화할 것.
- 피아식별 방안으로 피아식별띠 대신 접착테이프를 사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 군 부대 드론 불법 침입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는 각 군의 보안성과 불법드론에 대한 대응이 부실하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북한 등 주변국으로부터의 사이버 위협이 상존하는 상황에 대한 위협 평가와 사이버작전사의 대응 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3. 병무청 (20건)

- 정신질환 관련 군복무부적합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신 건강검사 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 장기대기 사유 사회복무요원 전시근로역 처분 증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병역명문가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를 위하여 병역명문가 예우 시설, 혜택 사항 등을 재확인 후 지원 제도를 정비할 것.
- 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상실자의 병역 면탈 의혹 행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이탈, 검직 등 복무의무위반에 대한 복무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 저출생 등에 따른 병력자원 부족 현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병력 수급 문제 해결 대책 방안을 마련할 것.
- 사회복무요원의 마약범죄, 성범죄 등 일반범죄 증가에 따른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것.
- 국방부 등과 협의하여 국민 공감대 및 시대상황을 반영한 산업기능요원, 예술·체육요원 등 보충역 제도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사이버상 병역면탈 조장 정보 게시 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 및 관련 수사 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 입영판정검사 시 마약류 검사를 철저히 시행하여 군내 마약류 유입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탈북자들에 대해 일정 기간 우리 사회 적응기간을 부여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이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하여 외국인 입대관련 법·제도를 운용·도입하는 만큼 우리 군에 적용 가능한 제도를 검토할 것.
- 다문화가정 병사에 대한 입대 전 맞춤형 상담·사전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군 복무 적응을 돕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지방청 시간선택제 공무원 결원 존재시, 수시로 본인 의사를 파악하여 근무시간 확대를 시행하고,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이 2인 1조 방식의 인사 배치가 아닌 1인 1부서 인사 배치 방안을 검토할 것.
- 군 입대가 특정시기에 몰리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불필요한 군입대 가산점을 줄여 입대 준비를 위한 부담을 완화할 방안을 검토할 것.
-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하다가 중도 포기하는 인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 국군 상비병력과 부사관의 전력 숫자가 감소하는 추세에 대해 미국의 외국인 모병 프로그램 'MAVNI'와 같은 프로그램 도입을 검토할 것.
- 사회복무요원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 중 특히 저소득층 미가입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병역판정검사 오류 근절을 위하여 재확인 점검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대구경북청의 병역판정검사 과실과 사건 은폐 관련 관련자 엄중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할 것.

4. 방위사업청 (51건)

- 방산업체가 수행하는 국방기술개발 협약사업의 규모에 맞게 예산을 확보할 것.
- 방위사업청 청사 신축사업 감리계약 체결 지연으로 사업이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할 것.
- 방위사업청 조직이 유인체계와 무인체계 사업조직이 서로 분리되어 있는 상황에서 유무인복합체계를 구현하는 데 있어 사업조직 간 불필요한 행정소요가 발생하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관련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원장과 기조실장을 관련 직무에서 배제하고 방위사업청 자체감사로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청구를 검토해 그 결과를 보고할 것.
- 방위산업정보시스템의 역할과 기능, 기대효과와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 KF-21 부품별 및 완제품 국산화율에 관해 현재 달성된 국산화율,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이 추진 중인 과제 등을 구체적으로 보고할 것.
- 방산업체는 선행연구를 위한 자료 제출을 위해 많은 박사급 등 인력과 비용이 투입되는데, 이에 대한 비용을 당연히 지불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그 비용 지불 방안을 검토할 것.
- 선행연구 요청항목 대부분이 비밀로 분류된 소요결정 문서로서 요청자와 작성자 간 보안 위배 가능성이 항상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방산업체 제출자료에 대한 환류체계가 없기 때문에 방산업체는 적극적인 투자의지를 상실할 수 밖에 없음. 선행연구의 기술적 타당성 등을 방산업체와 공유하면 방산업체의 R&D 투자방향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음. 선행연구 시 기업과 연구결과를 공유하는 환류체계를 검토할 것.
- 국가안보상 필요가 있을 경우 우주발사체 발사 허가 권한을 우주항공청장에서 국방부장관으로 조정할 필요성에 대해 검토할 것.
- 국가우주개발사업 절차 적용을 위해 다부처 사업일 경우는 방위사업법, 군 단독사업일 경우에도 국가우주위원회 심의를 간소화하기 위해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이 필요하므로 관련 규정 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
- AI와 관련하여 2020년 12월에 국가 차원의 윤리기준을 정립했는데,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국가윤리기준에 추가하여 별도의 국방부윤리기준을 정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리오셀계 탄소섬유 국산화 사업 관련 방위사업법 위반 사건에 대한 진행상황, 조치내용을 보고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무기통계를 국회 등에 적극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피아식별장치(IFF-Mode5)의 방산물자 지정 필요성에 관하여 검토할 것.
- 심의 보류된 방산물자 지정을 적극 검토하여 방산물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 헬기 비행정보 저장장치 개선 관련하여 방위사업청은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사업으로의 추진 여부를 조속히 검토할 것.

- 무기체계를 기대 수명주기만큼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부품 공급망을 관리할 수 있는 방산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것.
- 현대전에서 대형 공격헬기에 대한 무용론이 나오고 있으므로 아파치 헬기 추가 도입을 재검토할 것.
- 무기체계 업체선정 시 사업수행 역량을 갖춘 기업을 정확하게 식별해 내는 것이 중요함. 기술력 평가의 변별력 향상 및 평가위원의 전문성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 2011년~2015년 사이 절충교역 획득 가치는 약 80억달러였으나 2016년~2020년에는 약 8억 달러로 대폭 감소하였는데 이는 ‘외국 정부와 계약을 체결하여 군수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절충교역을 추진할 수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한 「방위사업법 시행령」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를 시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KF-21 인도네시아 분담금 감액에 따라 시제기를 포함하여 모든 가치이전은 분담금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여 분담비율 조정 결과를 관련 문서 및 합의서에 반영할 것.
- KF-21 공동개발 관련하여 인도네시아가 당초 분담금 1조 6천억원 중 6천억원만 납부하겠다고 하였는데, 감액된 1조원에 대한 재원마련 방안을 강구할 것.
- 해안정찰용무인항공기 사업의 기종결정 평가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할 것.
-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개발한 소형 정찰 자폭무인기를 합동참모본부 및 각 군과 협력하여 전방부대에 신속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국산 엔진은 국방규격 충족으로 2차 양산부터 K2전차에 적용되고 있지만, 국산 변속기는 국방규격 미충족으로 현재까지 적

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 군수용은 WTO의 제약을 받지 않으므로 우리 군에서 사용하는 드론의 핵심부품인 FC(flight controller)는 국산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
- K13기관단총 멜빵고리, 소음기, 방열덮개 등 부속품 문제 외 총기와 소음기 결합 제한과 총기내 탄약 폭발사고는 심각한 문제이므로 신속한 후속조치 및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
- 신형 화생방보호의 사업 지연 또는 중단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 GOP과학화경계시스템 성능개량사업 시험평가 단계에서 포복/위장 상태로 접근하거나 철책 전방에서 이상 행위를 감지하는 사전감지 능력을 평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 성능이 강화되고 있는 방탄복에 대응하고 개인화기까지 K-방산 수출 스펙트럼을 넓히기 위해 6.8mm 소총 개발을 노력할 것.
- 운용부대 실사격에서 탄약이 약실 내부에서 폭발했던 K13기관단총의 결함을 신속하게 해결할 것.
- 국방R&D 평가 구조를 도전적 과제 중심으로 하여 실패하더라도 페널티를 주지 않는 등 R&D를 민간에 널리 확산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것.
- 피복 관련 원단 바뀌치기 의혹을 받고 있는 업체 13곳에 대한 입찰참가 제한 조치를 하였는데 이에 따라 중증장애인 고용업체 등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실시할 것.
- FMS로 도입되는 사업에서 가격대가 상승하는 사업들이 있으니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

- 해병대상륙돌격장갑차 시험평가 도중 침수되어 연구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함.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향후 사업을 빠르게 재개해 해병대 전력 증강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것.
- 잠수함구조함 사업이 지연되었는데 관도급 분류시 장비의 특성 및 체계통합의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할 것.
- 해안정찰용 무인항공기를 A방산업체가 개발했는데 관세청에서 현재 조사를 하고 있음. 이는 방위사업청이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관리를 강화할 것.
- 국방품질경영체제(DQMS) 인증제도 운영이 부실하여 문제가 발생하면 생산 후 납품까지 해당 품목 보관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국방품질경영체제(DQMS) 인증 제도를 통해 업체가 받는 혜택이 경쟁입찰시 물품 적격심사에서 평점 1점 추가에 불과해 실질적인 제도 시행 효과를 얻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방산수출 시 중소기업 역할 축소, 시험평가 등 비용부담, GVC 진입의 어려움 등의 문제에 대해 K-방산 성장 지속을 위해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 미국의 CMMC(Cybersecurity Maturity Model Certification, 사이버보안 성숙도모델 인증제도)로 인해 K-방산 수출에 미칠 영향 등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 최근 5년간 절충교역 미이행으로 현금 몰수 후 해소된 금액(소멸된 가치)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
- 통합 절충교역 협상방안을 마련하여 방산 중소기업들의 기술과 제품이 다양한 절충교역 상품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대외군사판매(FMS) 사업의 절충교역 적극 추진을 위한 방위사업청의 입장과 향후 개선 방안을 보고할 것.
- 방산 수출허가 심사 건수가 증가하고 기술 난이도도 높아졌으므로 방위사업청의 전문성 보강방안을 검토할 것.
- 방산 관련 해킹이 날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중소기업들은 방산기술보호에 취약하므로 방산기술보호를 위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평가 모델을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방산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해킹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관련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안티템퍼링(anti-tampering) 기술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수출된 국내 무기체계를 외국이 역설계하여 도용하는 일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할 것.
- 수출형 FA-50 국산레이다 체계 적합성 검증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직접 지원을 심사할 경우, 우리 군의 포탄 비축물량, 외교관계 등이 한반도 안보상황에 미칠 영향을 신중히 고려할 것.

5. 육군본부 (29건)

- 초급간부 지원율이 저하되는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심층 전수 조사를 진행할 것.
- 3사관학교, 간호사관학교 졸업생을 장기복무대상자로 지정하는 등 초급간부 유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경계작전을 민간 군사기업(PMC) 등 민간으로 이양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태스크포스 구성의 필요성을 검토할 것.
- 아미타이거 4.0 통합기획단 출시는 2019년 1월 1일인데 육군 정책자료에는 2022년도에 출범한 것으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이를 시정할 것.
- 군 자녀들에 대한 교육 지원책을 마련할 것.
- 학군 후보생에 대한 지원을 사관생도에 대한 지원에 비해 부족하지 않도록 할 것.
- 군인을 위한 밀리터리 타운에 대한 연구용역을 통해 미래형 군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
- 화생방 보호의의 불량률이 56%에 달하므로, 빠른 시간 내에 하자 물자를 조치할 것.
- 제2논산훈련소에 대한 연구용역을 미리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과학화 경계작전 고성능 카메라 217대 중 75대에 문제가 발생한 바, 무상 보수 기간 연장에 대해 검토할 것.
- 박격포 포탄을 활용한 드론 부대 구성을 고려할 것.
- 헬리콥터 도입 예산 대신 드론에 대한 첨단장비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

- 육군사관학교와 육군3사관학교를 통합하여 단일 사관학교로 만드는 방안의 사전 타당성을 검토할 것.
- 학군사관과 학사장교를 통합하여 하나의 제도로 운영하는 방안의 사전 타당성을 검토할 것.
- 탄약창을 조속히 지하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보병 위주의 인재 양성이 아닌 미래전에 부합하는 포병, 항공, 공병 등의 인재 양성을 할 것.
- 중국산 부품이 포함된 CCTV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CCTV의 보안 점검을 매년 철저히 진행할 것.
- 육군 간부모집 앱의 이용률이 저조하고 모바일로는 지원서 작성이 불가능한 바,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
- 포병대대 자체적인 K9포신 교체 훈련 및 관리 훈련 정기화에 예비 포신 여유분 확보 등 철저한 전시준비태세 방안을 마련할 것.
- 32사단 신병교육대 수류탄 사고와 관련해, 입대 후 심리상태 평가와 관리방법을 개선할 것.
- 파주에 위치한 제1보병사단에 대해 「군 급식품목 계획생산 및 조달에 관한 협정서」 제4조 제4항에 따라 경인북부수협에서 납품하도록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사능 작전세트를 조기에 보급할 것.
- 경찰청이 계약을 취소한 테이저건 제품을 군에서는 수의계약을 체결한 바, 해당 제품의 안정성을 재검토하고 계약 여부를 다시 평가할 것.
- 탄피회수 완화 시범사업에 대해 전 부대로 확대적용을 추진하

는 방안을 검토할 것.

- 특전사에 미국산 칼을 복제한 중국산 모조품 칼을 보급한 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광주 평동 군 훈련장은 국가적 낭비 초래·인근 주민 재산권 침해·지역균형발전 저해 야기 등의 문제를 야기하므로 폐쇄를 검토할 것.
- 마일즈 사업에서 뇌물을 제공하여 부정한 수익을 취한 업체에 대해 그 이익을 회수할 것.
- 2023년 8월 코브라 헬리콥터의 회전날개가 분리된 사건의 조속한 사고원인 파악과 대책을 마련할 것.
- 수통 초도보급품 지급을 위한 27년~31년 중기 계획 및 국방부 피복정책실무회의의 결과를 보고할 것.

6. 해군본부 (13건)

- 해군은 고가의 군수품, 총기·탄약류 등에 있어 지속적으로 분실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현행 군수품 관리체계의 미흡한 점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
- 대함미사일의 미발사 문제 및 명중률 저조 문제에 대해 실제 훈련시 확인되는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
- SM-3 도입에 있어 우리 군에 실질적 전력증강이 될 수 있도록 지적인 문제들, 가격, 수량과 성능, 전력화 시기, SM-2의 실패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재분석해야 할 것.
- 해군진해호텔을 비롯한 위탁 관리 중인 모든 해군호텔에 대한 자체 감사를 진행할 것.
-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한 해양위원회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해양 영역인식(Maritime Domain Awareness, MDA)을 구현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통제할 것.
- 수입 함정과 항공기의 정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비 인력 확충 및 MRO(Maintenance·Repair·Overhaul) 업체를 활용하는 방안의 필요성을 검토할 것.
- 입항 후에도 육상 휴식 공간이 없어 함정에 머물러야 하는 함정 근무자를 위해 육상 사무실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진해는 협소한 수로에 많은 함정이 있어 적의 주요 타격 목표가 될 수 있고, 운용에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부산에 해군작전사령부를 둔 취지를 살려 부산 해군기지의 활용성을 높일 것.
- 해양 방사능 측정 장비가 도입 한 달만에 고장이 나고, 초기 계획과 다르게 해상이 아니라 육상에서 사용되는 등 여러 문

제가 발생했으므로 해군의 자체 감사를 실시할 것.

- 해양 방사능 측정에 있어 한국원자력안전연구원 등 타 기관과 교차검증을 통해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할 것.
- 해군 병사에게도 육상 근무 시 병 기본훈련을 실시하는 방안의 필요성을 검토할 것.
- 군무원 인력운용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군무원 주거지원 등 처우개선에 대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
- 함정근무와 같은 고위험 직무에 대해 수당인상을 포함한 실질적 보상방안을 마련할 것.

7. 공군본부 (14건)

- 고고도·중고도 정찰무인기의 중요성과 무인기 조종사의 열악한 처우를 감안하여, 항공수당의 대폭인상을 검토하고 조종사 충원을 위한 유인책을 마련할 것.
- KF-21 전투기 Block-Ⅲ를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 2030년까지 확보될 위성 전력의 생존성 확보를 위해 고출력레이저 위성추적 및 레이더우주감시 전력의 신속한 전력화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 우주항공청·한국항공우주연구원·한국천문연구원 등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우주영역에 대한 인식 능력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
- 공군은 군 사고로 인한 피해배상 심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소리를 더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지급되지 않은 배상금이 있다면 조속히 집행함으로써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할 것.
- 전투기 조종사 항공수당 인상을 통해 민간항공사 조종사와의 보수격차를 줄이고,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외부유출을 방지할 것.
- 국가가 양성한 전투기 조종사가 민간 항공사에 취업할 경우, 양성비용의 일정부분을 민간항공사가 부담하는 것을 검토할 것.
- 공군 예비역 정책간담회에 초급간부가 행사 지원을 위해 참여하지 않도록 하고, 골프 친목 행사로 오해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블랙이글스 부대 주둔으로 인한 주민 피해와 환경 영향에 대해

공군의 적극적인 입장과 대책이 필요하며, 발암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스모크 개발을 검토할 것.

- 공중급유기를 추가 도입하기 위해 공군이 최선을 다할 것.
- 공군의 각종 전력 증강 사업에 있어 예산의 한계가 있는 바, 공군은 자체적인 우선순위를 명확히 할 것.
- 공군의 무인항공기 전력화와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수당 인상을 신속히 추진할 것.
- CCT 선발횟수를 늘려서 인원 충원속도를 높이고, 합당한 수당 금액을 지급하여 이탈 인원이 감소하도록 노력할 것.
- 사용 빈도가 지극히 낮은 전시 비상활주로의 고도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검토를 진행할 것.

8. 해병대사령부 (12건)

- 군 가산복무지원금 환수가 불가능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하고, 향후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 육군에서 진행 중인 AI 기반 경계작전태세 구축 시범사업을 모니터링하여 서북도서 경계작전태세 구축에 적용 가능한지 검토할 것.
- 김포반도에 민군복합타운을 조성하는 방안의 타당성을 검토할 것.
- 민간인의 재산권 활용을 위한 차원에서 교동도 지역의 민간인이북통제선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
- 서북도서에서 근무하는 군인의 특수지근무수당이 일반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에 비해 부족하므로 수당 인상을 추진할 것.
- 해병대 1사단 장병 순직 사고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병대는 작전, 교육, 부대관리에 힘쓸 것.
- 舊 해병대사령부 본관을 해병대 역사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해병대 장병 복지를 위한 다목적 체육시설을 확보할 것.
- 적의 드론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조속히 도입하고,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할 것.
- 전·평시 구분없이 해병대 본연의 임무인 상륙작전의 원활한 작전수행을 위해서는 중형 표준차량 확보에 필요한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므로, 추가 예산확보를 위해 국회나 국방부에 그 필요성을 적극 피력할 것.
- 장병들의 생명 보호와 안전을 도모하고 해병대 안전 문화 조성을 위한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병대 안전단의 추가 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할 것.

- 해병대 상륙돌격장갑차(KAAV-2)의 적기 전력화를 위해 노력할 것.

9. 육군 제2작전사령부(8건)

- 공공기관의 대(對)드론체계 구축이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이라는 이유로 우선순위에 밀리는 현실을 고려할 때, 법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
- CCTV 통합관제센터와 통합방위지원본부 간 영상정보 공유가 되지 않은 6개소의 구축 지연을 조치할 것.
- 해안경계부대 근무자들의 처우와 관련해 제2작전사령부 차원에서 행정소요 감소, 감시 장비 적시 교체 등 해안경계부대의 피로를 경감시키고 전투력을 보존할 방안을 마련할 것.
- 용사 진급심사를 꼼꼼하게 진행하여 사고율을 줄이고 군에 근무하는 자부심이 들 수 있도록 추진할 것.
- 수명 연한을 초과한 노후 장비를 최대한 빠르게 교체할 것.
- 외출·외박의 제한 규정을 국방부나 합참, 육군본부, 해군, 공군 등의 기준과 형평성을 맞추도록 노력할 것.
- 현재 제2작전사령부 해안감시를 위해 운영 중인 육군경비정 16척 모두 내구연한 15년을 초과했으므로, 육군 경비정 노후화에 따른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 제2작전사령부는 제2작전사령부로 지휘체계가 이전되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직권을 남용한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에 대해 항명 및 직권남용 혐의로 징계를 요청할 것.

10. 국방과학연구소 (8건)

- 국방과학연구소는 보안성 등으로 민간이 수행하기 어렵거나 수익을 내기 어려운 사업의 연구개발에 치중할 것.
- 국방과학연구소 「국방AI센터」를 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AI 데이터 보안정책과 체계를 구축할 것.
-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장이 학회장을 겸직하는 학회에 많은 직원이 참석하고 1,600만원 가량의 예산을 집행한 것은 직위를 이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철저한 진상조사와 감사를 실시할 것.
- 2022년부터 직원 상여금 지급 사례가 없는데, 우수업무 성과자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의 금전적 보상이 필요하므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원에게도 보국훈장이 수여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국방과학연구소는 장애인 고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수출형 FA-50 국산레이다 체계 적합성 검증 과제와 유무인전투기 복합체계용 무인전투기 AESA(Active Electronically Scanned Array, 능동형 전자주사식 위상배열) 레이다 기술개발 과제간 중복성 여부에 대하여 검토할 것.
- 북한에 추락한 무인기를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정밀 분석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1. 국방기술품질원 (5건) 및 국방기술진흥연구소 (2건)

1) 국방기술품질원

- 방산기술보호센터가 그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 법률상 고지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아 용역에 낙찰 받은 회사뿐만 아니라 근로자 개인의 중대한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국방품질경영체제(DQMS)를 제대로 관리·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수조사도 실시하는 등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국방기술품질원은 장애인 고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국방기술품질원은 무기체계의 결함을 신속히 발견하고 보수할 수 있도록 야전부대에 대한 정기적 사후운영평가 방안을 검토할 것.

2) 국방기술진흥연구소

-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선행연구, 핵심기술 기획 및 관리, 부품 국산화사업 등의 수행을 위해 1조원 이상의 예산이 사용되고 있으므로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그 기능의 특성상 업무의 전문성 및 업무의 연속성 등이 요구되므로 계약직 비중을 줄이고 정규인력을 확보하는 등 인력운영 전반에 대해서 개선할 것.

IV

증인 · 참고인 채택 현황 및 신문내용

1. 증인 · 참고인 채택 현황

구 분	성 명	직 업 (소속 및 직위)	감사기관 (출석요구일)	신문요지
참고인	허옥경	강화군 주민	종합감사 (' 24.10.24)	북한 괴소음 대남방송에 대한 주민피해 및 고충사항, 피해에 따른 주민요구사항
참고인	안미희	강화군 주민	종합감사 (' 24.10.24)	북한 괴소음 대남방송에 대한 주민피해 및 고충사항, 피해에 따른 주민요구사항
참고인	채기성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이사	종합감사 (' 24.10.24)	월남전 참전군인 현황, 실태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 필요성에 대한 증언

2. 참고인 신문내용

대상기관/ 출석일시	주 요 신 문 내 용
종합감사 (’24.10.24)	《참고인 허옥경 (강화군 주민)》 ○ 대남방송으로 인한 피해현황에 관한 질의 《참고인 안미희 (강화군 주민)》 ○ 대남방송으로 인한 피해현황에 관한 질의 《참고인 채기성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이사)》 ○ 월남전 참전 유공자가 겪고 있는 고충에 관한 질의